

2024 - 협력 - 01

인천교육-2024-0267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책임자 : 정영주(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부 교육연구사)

김태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문영진(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안혜경(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충북교육정책연구부 교육연구사)

안영찬(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기명(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이동욱(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연구원)

협력연구원 : 김범환(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 육 정 책 연 구 소

-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팀)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 ※ 이 연구보고서 파일은 다음의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ice.go.kr> - 교육 - 교직원지원 - 교육정책연구소)

연 구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의 교육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교육부 정책이 지역의 교육 현실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혁신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며, 국가 교육정책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민선교육감 시대와 더불어 시작된 지방교육 자치와 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2011년 9월,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뒤이어 2012년 전남, 2013년 광주, 경기, 2015년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세종, 충북, 제주, 2016년 강원, 충남, 대구에서 교육정책연구 전담 기구를 설립하였다. 2019년 경북, 대전, 울산까지 교육정책연구 전담 기구가 설립됨으로써 2024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교육정책연구 전담 기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교육정책연구소들은 길게는 10년 이상, 짧게는 5년 이상 연구 성과를 축적 하며 지방교육 자치와 시도교육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한 연구(나민주 외, 2019; 민윤 외, 2018; 박수정 외, 2024; 이상철 외, 2018; 장경숙 외, 2019; 정재균 외, 2017)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교육청별 교육정책 연구소의 조직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 그간의 성과와 한계,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해 보고, 교육정책연구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정책연구소의 조직, 기능, 인적 구성, 업무 범위, 예산, 연구 내용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다. 시·도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타시도의 운영 내용 및 방식을 벤치마킹하거나, 연구소 간에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로부터 시작된 초·중등교육권의 시도교육청 이양 관련 2 단계 법령 정비 완료에 따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사무 추진을 위한 기획 기능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상철 외, 2018).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정책 개발·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사업 확대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발달 등 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교육정책연구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비전을 수립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한편,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와 유관기관들은 연구소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연구 진행, 지역별 교육정책의 연계 강화, 교육정책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운영 인력, 예산, 사업 범위 등에서 시도별 연구소의 여건이 다르고, 연구소를 관장하는 기관의 풍토에도 차이가 있다. 교육정책연구소 간 연계와 협력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을 극복하고, 연구소들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도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 첫째,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 둘째,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 셋째,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구성원 대상 인식 조사
-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 도출

나.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설문조사
-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표 1〉 연구 절차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자료 수집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관련 이론적 배경	문헌 분석
현황 분석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문헌 분석
인식 조사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	설문 조사
발전 방안 분석 및 제시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3. 연구 결과

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 교육정책연구소는 시도교육청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각 지역의 교육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장경숙 외, 2019; 민윤 외, 2018; 이상철 외, 2018; 박수정 외, 2024).

- 교육정책연구소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 분권화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의 개발과 실행이 더욱 필요해졌다. 둘째, 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 교육 현장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대한민국에서 교육정책연구소의 역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발전해 왔다. 시도교육청의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은 민선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크게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민선교육감들은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공약 이행에 주력해 왔다. 이는 기존의 교육부 정책이 지역의 교육 현실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혁신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며, 국가 교육정책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도교육청들은 각자의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해오고 있다(정재균, 2017; 차상철, 2014).
- 최근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의 질적 향상,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전국 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 한편,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는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연구 진행, 지역별 교육정책의 연계 강화, 교육정책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에는 공동연구 과제 수행, 연구 성과 발표, 교육정책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이 포함된다. 정기적인 실무자 협의회와 연구자 회의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진하며, 네트워크의 운영과 연구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b).

나.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해 정부출연 공공기관 연구소에 대한 연구, 조직 이론, 성과 관리 이론, 재무 관리 이론 등을 참고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각 항목은 연구소의 목적(비전) 및 전략, 운영, 성과 관리, 재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 분석 틀에 근거하여 연구진에서 운영 목적, 조직 현황, 인적 구성, 추진 사업, 연구 성과 등으로 조사지를 구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소 공식 명칭, 기본 방향(미션, 비전, 목적, 전략), 조직 현황(교육청 내 편제, 연구소 인원 구성), 최근 3년 예산, 2023년 사업 성과(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2023년 연구자별 연간 연구물 수, 2024년 사업 계획(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향후 발전 방안(전략), 운영의 법적 근거,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규정으로 구성하였다.
-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미션 및 비전에서 연구소마다 그 설정 체계는 다소 다르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임을 확인하였다. 즉 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목적에 있어서는 현장 지향적 교육정책 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략으로는 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evidence-based), 교육공동체 및 정책연구 수행과 관련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협력적인 연구 수행을 지향하고 있다.
- 둘째,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구소별 운영 예산을 확인한 결과, 2022년 대비 2024년 운영 예산은 4개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증액되었으며, 2023년 대비 2024년 운영 예산은 9개 시도에서 증액되었는데, 교육종단연구 시작으로 인한 예산 배정 등 일부 비목 예산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23년 대비 2024년 운영 예산이 감액된 곳은 7개 시도로, 교육종단연구 종료로 인한 관련 예산 미배정, 연구사업비(연구비) 감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사업비(연구비) 감액이 교육정책연구의 축소 또는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셋째, 인원 구성과 담당 업무 비율을 살펴본 결과,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정원은 대략 10명 내외였으며, 대다수 연구소는 연구(위)원과 교육연구사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연구사는 연구 수행보다 행정 업무 수행 비율이 높았으며,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인 연구(위)원이 없는 지역은 주로 교육연구사, 과견교사, 학습연구년 교사가 연구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 연구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넷째, 2023년 기준 연구자별 연간 연구물 수를 확인한 결과,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여부, 연구 과제의 규모, 현안 과제 수행 여부 등에 따라서 생산되는 연구물의 수량과 분량의 분포가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섯째, 연구소별 2023년 사업 성과를 살펴본 결과, 정책연구 및 개발 측면에서는 대부분 자체 기본연구, 위탁연구,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는 현장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현안 분석 및 제언 측면에서는 주로 국내외 동향 분석, 이슈페이퍼 또는 브리프 발간, 연구 및 정책 홍보를 위한 웹진, 카드뉴스 등을 발간하고 있었다. 또한 포럼, 학술대회, 토론회,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구 협력 및 연대 영역에서는 모든 연구소가 전국교육정책 연구소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었고, 현장 자문단 및 지원단 등을 운영하였다. 국내 대학과의 교류나 학회 학술대회 참석 등 학술교류도 실시하고 있었다.
- 여섯째, 연구소별 2024년 사업 계획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사업 성과와 비교했을 때, 정책연구 및 개발 측면에서는 연차보고회와 연구 결과발표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이를 공유하는 활동이 강화되었고, 데이터 기반 연구와 인사이트 발간이 증가하여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연구 및 개발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안 분석 및 제언 측면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이슈페이퍼와 교육동향 보고서 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슈페이퍼는 연구 결과를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교육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과 제언 강화와 더불어 정책담당자 및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연구소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협력 및 연대 측면에서는 유네스코 국제 포럼, 경북국제교육포럼, 서울 국제교육포럼 등 국제 협력 활동 강화 노력과 학생 모니터단, 학생 정책토론회, 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구성원 대상 인식 조사

-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정책연구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개인정보 수집, 일반 특성, 교육정책연구소 비전(목적) 달성을 운영 전략, 연구 전문성 강화 발전 방안, 인적 구성 및 담당 업무 개선 방안,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발전 방안, 대외적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활동 발전 방안, 교육정책연구소 발전 방안(자유기입)으로, 총 11문항을 구성하였다.
- 최종 응답은 85명이 응답하였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은 10명(11.8%), 교육연구사(장학사) 24명(28.2%), 연구(위)원 26명(30.6%), 주무관 13명(15.3%), 파견(연구)교사 12명(14.1%)이 응답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 소속 기관에 따라 살펴보면, 본청 21명(24.7%), 직속기관 64명(75.3%)이 응답하였다.
-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연구소의 비전(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 전략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는 현장 기반 연구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나, 1순위로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우선순위로 보면, 구성원의 직책과 연구소의 소속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었다. 교육연구관(장학관)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교육연구사(장학사)는 현장 기반 연구 강화를 더 중요시하였다. 본청 소속 연구소 구성원들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직속기관 소속 연구소 구성원들은 현장 기반 연구 강화를 우선순위로 선택하였다.
- 둘째, 연구소의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1순위 답변으로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직책별로는 교육연구관(장학관) 및 교육연구사(장학사)는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연구(위)원들은 연구의 자율성 확대를, 주무관은 외부 자문 및 심의 강화를, 파견(연구)교사는 공동 및 보조 연구원 제도 확대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직책별로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 본청 소속 연구소 구성원들은 연구의 자율성 확대를, 직속기관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여 소속에 따른 관점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셋째, 연구소의 인적 구성 및 담당 업무 개선 방안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연구자 정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1순위 답변으로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직책별로는 교육연구관(장학관), 교육연구사(장학사), 주무관, 파견(연구)교사는 연구자 정원 확대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에 비해, 연구(위)원은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직책별로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 본청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자 정원 확대를, 직속기관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자의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소속별 관점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넷째, 연구소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발전 방안으로는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이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연구소가 정책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되,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직책별로는 교육연구관(장학관), 교육연구사(장학사)는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주무관과 연구(위)원은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파견(연구)교사는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소속별로는 본청 소속 구성원들은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직속기관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다섯째, 연구소의 대외적 위상 및 기능 강화 발전 방안으로는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직책별로는 교육연구관(장학관), 교육연구사(장학사), 주무관은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데 비해, 연구(위)원과 파견(연구)교사는 연구결과물 발간 및 배포 대상 확대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직책별 관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속별로는 본청 소속 구성원들은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 및 연구결과물 발간 및 배포 대상 확대를, 직속기관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성과 발표회 및 성과 공유회 횟수 확대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여섯째,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활동 발전 방안으로는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직책별로는 교육연구관(장학관)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를, 교육연구사(장학사)는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

과 공유 및 발표를, 주무관과 연구(위)원은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를, 파견(연구)교사는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소속별로는 본청 소속 구성원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를, 직속기관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4.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

-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을 전략, 운영, 성과 관리, 재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발전 방안

구분	범주	내용
교육정책 연구소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속 안정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 ❖ 현장 기반 연구 확대 ❖ 연구 자문 및 심의 내실화 ❖ 외부 연구자원 활용
	연구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위)원 신분 안정 및 정원 확대 ❖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여건 확보 ❖ 주무 부서와 긴밀한 관계 형성 ❖ 신뢰 문화 형성
	연구 효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류 시스템 강화 ❖ 연구 성과 공유 확대 ❖ 주관 행사 및 사업 다양화 ❖ 위탁 연구 용역 관리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연구비 예산 수립
전국 교육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위상 확립 ❖ 세부적인 비전 수립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협력 활성화 ❖ 공동워크숍 내실화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 연대 활동 강화 ❖ 공동연구 성과 확산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연구소 예산 수립

I 서론 _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3. 연구의 한계점	8

II 이론적 배경 _ 11

1.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11
2.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분석 틀	24

III 운영 현황 분석 _ 29

1. 분석 개요	29
2. 운영 현황	30
3. 소결	67

IV 인식 조사 _ 71

1. 인식 조사 개요	71
2. 설문 결과 분석	72
3. 소결	84

V 결론 및 제언 _ 89

1. 교육정책연구소 발전 방안	90
2.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	96

참고문헌 _ 100

〈표 I-1〉 연구 방법	7
〈표 II-1〉 교육정책연구소 설립 시기 및 형태	15
〈표 II-2〉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공동연구 주제	23
〈표 II-3〉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분석 틀	26
〈표 III-1〉 교육정책연구소 기본 방향(비전, 목적, 전략)	31
〈표 III-2〉 교육정책연구소 최근 3년 예산	34
〈표 III-3〉 교육정책연구소 인원 구성 및 담당 업무 비율	38
〈표 III-4〉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자별 연간 연구물 수(2023년)	41
〈표 III-5〉 교육정책연구소 2023년 사업 성과	46
〈표 III-6〉 교육정책연구소 2024년 사업 계획	54
〈표 III-7〉 교육정책연구소 향후 발전 방안(전략)	63
〈표 III-8〉 교육정책연구소 운영의 법적 근거 및 규정	65
〈표 IV-1〉 교육정책연구소의 비전(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 전략	73
〈표 IV-2〉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75
〈표 IV-3〉 교육정책연구소의 인적 구성 및 담당 업무 개선 방안	77
〈표 IV-4〉 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발전 방안	79
〈표 IV-5〉 교육정책연구소의 대외적 위상 및 기능 강화 발전 방안	81
〈표 IV-6〉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활동 발전 방안	83
〈표 V-1〉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발전 방안	89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점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는 설립 형태나 명칭에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육청이 산하 기구로 설립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¹⁾(이하 교육정책연구소)가 대표적이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의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각 지역의 교육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교육부 정책이 지역의 교육 현실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혁신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며, 국가 교육정책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선교육감 시대와 더불어 시작된 지방교육 자치와 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2011년 9월,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뒤이어 2012년 전남, 2013년 광주, 경기, 2015년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세종, 충북, 제주, 2016년 강원, 충남, 대구에서 교육정책연구 전담 기구를 설립하였다. 2019년 경북, 대전, 울산까지 교육정책연구 전담 기구가 설립됨으로써 2024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교육정책연구 전담 기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정책연구소들은 길게는 10년 이상, 짧게는 5년 이상 연구 성과를 축적하며 지방교육 자치와 시도교육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재균 외(2017)는 시도교육청의 정책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수행된 연구과제의 주제, 방법론,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특히, 각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가 지역 교육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정책연구가 지역 맞춤형 교

1) 지역마다 교육정책연구소·교육정책연구센터·교육정책연구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육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연구 인력 부족과 연구소의 독립성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민윤 외(2018)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 방법론, 그리고 정책 반영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들이 도교육청의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교육현장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와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상철 외(2018)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경숙 외(2019)는 정부출연교육연구기관과 시도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5년간(2012-2016) 발간된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의 연구 주제, 범위, 수행 형태 등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나민주 외(2019)는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방교육자치와 정책 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구소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교육정책의 발전과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박수정 외(2024)는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연구의 주제들을 분류하고, 연구소별로 연구의 초점과 방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 연구소가 지역의 교육적 필요 및 민선교육감 시기에 따라 상이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다양성이 지역 교육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간의 성과와 한계,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해 보고, 교육정책연구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연구소의 조직, 기능, 인적 구성, 업무 범위, 예산, 연구 내용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다. 시·도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타시도의 운영 내용 및 방식을 벤치마킹하거나, 연구소 간에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로부터 시작된 초·중등교육권의 시도교육청 이양 관련 2단계 법령 정비 완료에 따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사무 추진을 위한 기획 기능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상철 외, 2018).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정책 개발·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사업 확대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발달 등 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교육정책연구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비전을 수립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와 유관 기관들은 연구소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연구 진행, 지역별 교육정책의 연계 강화, 교육정책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운영 인력, 예산, 사업 범위 등에서 시·도별 교육정책연구소들의 여건이 다르고, 교육정책연구소를 관장하는 기관의 풍토에도 차이가 있다. 교육정책 연구소 간 연계와 협력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극복하고, 네트워크 소속 연구소들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도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분석,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구성원 대상 인식 조사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시도교육청교육정책연구소의 정의, 필요성, 역사, 특징, 주요 기능,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17개 시도교육청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 기본 방향, 최근 3년간(2022~2024년) 운영 예산, 인원 구성 및 담당 업무 비율, 2023년 연구자별 연간 연구물 수, 2023년 사업 성과, 2024년 사업 계획, 향후 발전 방안 및 전략, 운영의 법적 근거 및 규정 등을 살펴보았다.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구성원 인식 조사를 통하여 교육정책연구소의 비전(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 전략, 전문성 강화 방안, 인적 구성 및 담당 업무 개선 방안,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방안, 대외적 위상 및 기능 강화 발전 방안,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활동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운영 현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정책연구소와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표 I-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관련 이론적 배경은 문헌 분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은 연구(위)원 4명과 연구사(장학사) 3명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에서 구안한 양식을 배부한 후 각 교육정책연구소 실무자를 통해 수집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는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한 분석틀을 토대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공동연구팀에서 개발한 설문 조사 도구로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분석 및 전문가(공동연구팀) 협의회와 자문을 통해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1-1〉 연구 방법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자료 수집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관련 이론적 배경	문헌 분석
현황 분석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문헌 분석
인식 조사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	설문 조사
발전 방안 분석 및 제시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제언들은 운영 현황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연구소의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정책연구소의 조직 구조와 인력 구성의 차이가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구성원 대상 질적연구 등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각 연구소의 다양성과 특수성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다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로만 제언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III장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제시했으나, 각 연구소의 조직 구조, 인력 구성, 사업 및 예산 규모 등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값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동질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 우위가 형성될 수 없으며, 특정 항목의 극단적인 값이 평균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값을 바탕으로 한 단순 비교는 각 교육정책연구소의 실제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IV장의 인식조사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각 교육정책연구소의 학습연구년 교사를 제외하면 약 180명이 전체 응답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85명이 설문 응답에 참여했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정책연구소 구성원들의 인식 및 의견으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직급별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배경

1.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2.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분석 틀



이론적 배경

1.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가. 교육정책연구소 정의

교육정책연구소는 시도교육청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역의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연구소는 각 지역의 교육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장경숙 외, 2019; 민윤 외, 2018; 이상철 외, 2018; 박수정 외, 2024).

또한,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 분야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교육기관에 전략적 제언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한다(나민주 외, 2019; 장경숙 외, 2019; 이상철 외, 2018).

교육정책연구소의 역할은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연구소는 교육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연구소는 데이터 분석, 종단연구, 현장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이러한 결과는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의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 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성병창, 2014; 정재균, 2017; 장경숙 외, 2019).

교육정책연구소는 그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소는 교육정책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한다(민윤 외, 2018; 정재균, 2017). 둘째, 연구소는 지역의 특정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한다(장경숙 외, 2019). 셋째, 연구소는 이미 시행된 교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강동윤 외, 2021; 민윤 외, 2018; 이혜정, 2017),

결론적으로, 교육정책연구소는 단순한 연구 기관을 넘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는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 교육 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장경숙 외, 2019; 민윤 외, 2018; 나민주 외, 2019).

나. 교육정책연구소의 필요성

교육정책연구소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 분권화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의 개발과 실행이 더욱 필요해졌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지역의 특수한 요구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정책연구소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차상철, 2014; 정재균, 2017).

둘째, 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 교육 현장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내 교육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제시된 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박수경 외, 2024; 성병창, 2014).

셋째,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방교육 가치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 연구와 분석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자율적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장경숙 외, 2019; 이혜정 외, 2017).

넷째, 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지역마다 교육적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정재균, 2017; 장경숙, 2019).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교육정책연구소는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현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돋는다(최준렬 외, 2021; 나민주 외,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역사

대한민국에서 교육정책연구소의 역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발전해 왔다. 시도 교육청의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은 민선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크게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민선교육감들은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공약 이행에 주력해 왔다. 이는 기존의 교육부 정책이 지역의 교육 현실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혁신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며, 국가 교육정책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도교육청들은 각자의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해오고 있다(정재균, 2017; 차상철, 2014).

이러한 지방교육 자치와 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 차원의 독립적인 교육정책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해, 2011년 9월,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연구소는 전북교육청 산하 미래교육연구원에 소속된 직속기관으로,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지방 교육정책연구소로서 그 역할을 시작했다(나민주 외, 2019; 정재균, 2017;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18).

전북의 사례는 다른 시도교육청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곧이어 2012년 4월 전라남도교육청이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원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광주는 2013년 8월에 교육연구정보원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같

은 해 9월 경기도는 재단법인 형태로 경기교육연구원을 설립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성병창, 2014).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년 1월 교육연구정보원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교육정책 연구를 강화하였으며,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도 2015년 3월에 각각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특히, 부산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청 본청(교육감) 소속으로 설립되어 보다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충청북도는 2015년 3월 교육청 본청 정책기획관 산하에 정책연구담당 부서를 설치하였고, 제주는 융합과학연구원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2016년 3월 강원도, 대구, 충청남도는 각각 교육연구원 산하에 교육연구부(정책연구팀), 교육정책연구부, 교육연구부(교육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정책 연구를 본격화하였다(최준렬 외, 2021; 양성관, 2019;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2019년에는 경북, 대전, 울산 등에서 교육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이들 연구소는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이러한 발전은 지방교육 자치와 교육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양성관, 2019; 나민주 외, 2019; 장경숙 외, 2019).

2024년 기준 교육정책연구소 설립 시기 및 형태를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교육정책연구소 설립 시기 및 형태

지역	설립 시기	설립 당시 형태	현재 형태	현재 명칭
전북	2011.09.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직속기관(미래교육연구원) 소속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전남	2012.03.	직속기관(교육연구원) 소속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광주	2013.08.	교육청 본청(정책기획과) 소속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교육정책연구센터
경기	2013.09.	재단법인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
인천	2014.09.	직속기관(교육과학연구원) 소속	교육청 본청(부교육감)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서울	2015.01.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부산	2015.03.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교육청 본청(교육감)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경남	2015.03.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직속기관(미래교육원)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세종	2015.03.	직속기관(교육연구원) 소속	교육청 본청(미래기획관)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충북	2015.03.	교육청 본청(정책기획관) 소속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부
제주	2015.03.	교육청 본청(정책기획실) 소속	본청(정책기획과) 소속	교육정책연구센터
강원	2016.03.	직속기관(교육연구원) 소속	직속기관(교육연구원) 소속	교육연구부 (정책연구팀)
충남	2016.03.	직속기관(교육연구원) 소속	직속기관(교육과정평가정보원)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대구	2016.03.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직속기관(미래교육연구원) 소속	교육정책연구부
경북	2019.03.	직속기관(교육청연구원) 소속	직속기관(교육청연구원) 소속	정책연구부
대전	2019.01.	직속기관(교육과학연구원) 소속	직속기관(교육과학연구원)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울산	2019.09.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라. 교육정책연구소별 특징

전국의 시도교육청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연구소는 해당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는 지역별 교육 정책 개발과 평가를 담당하며,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상철 외, 2018; 장경숙 외, 2019; 민윤 외, 2018;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는 전문적인 교육정책 연구를 통한 서울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의 근간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 제도 연구, 교육시책 연구, 교육회복 연구, 미래교육체제 연구, 종단연구 등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내외 교육동향 분석을 통한 시의성 있는 교육정책 방향 제시 및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현안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은 경기 지역의 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경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증거 기반의 교육 정책 지원을 목표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성과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경기교육의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 체계성을 강화하고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교육정책연구소는 현장 지향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인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인천의 특수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부(충북교육연구정보원)는 충북 지역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혁신성과 미래 교육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며, 충북 교육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연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정책과 현장을 잇는 연구 성과 공유와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현장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충북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교육연구부(교육정책연구센터)는 교육정책의 상시 분석과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정책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충남 교육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

며, 실천적 교육정책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과 소통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연구를 추진하여, 충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는 실천-정책-연구의 선순환을 통한 교육 주체의 성장과 세종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 과제별 전문가 연계와 교육청 부서 협업을 통해 정책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정책 역량 강화 지원과 정책연구와 현장 연구회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교육정책연구소는 대전 교육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실천적 교육정책 연구를 통해 대전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현안과 국내외 교육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연구부(정책연구팀)는 강원 지역의 교육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교육의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 교육을 주도하는 교육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강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 현안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라남도의 교육정책연구소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남 지역의 특수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통해 전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교육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남 지역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전북의 교육 현안과 미래지향적 교육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 교육의 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전북 지역의 특수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전북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의 교육정책연구센터는 광주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며, 지역 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부는 대구 교육 현안을 분석하고 연구 과제를 통해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대구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연구소 운영, 교육정책 연구 결과 공유 활성화, 학교 현장 지원형 학습 연구년제 정착을 목표로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정책연구부는 교육현장 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미래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국내외 교육 동향 분석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 방향 제시 등의 연구를 통해 경북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교육정책연구소는 경남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정책을 개발하며, 현장 공모를 통한 교육 현안 중심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정책 일체화를 위한 교육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현장과 소통하는 실천적 교육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경남 지역의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는 울산 교육의 방향과 역량을 선도하는 교육혁신 의제와 정책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 교육 정책 연구 성과 공유 및 연구 자료의 지속적 DB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현장 지향 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의 교육정책연구소는 부산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지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이루는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부산 지역의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및 직업교육 연계 강화가 주요 연구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센터는 제주 지역의 특수한 교육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 교육 정책 연구를 추진하며, 교직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의 교육정책연구소들은 각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 연구를 통해,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고 있다(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마. 교육정책연구소의 주요 기능

교육정책연구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교육정책의 기획 및 개발이다. 이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 점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교육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소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박수정 외, 2024; 민윤 외, 2018; 이상철 외, 2018).

또한, 교육정책연구소는 정책의 실행과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과를 분석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 방법론을 활용해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필요 시 정책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평가 기능은 정책이 목표로 하는 교육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재균, 2017;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양성관, 2019).

교육정책연구소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교육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며, 교육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 결과는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교육정책연구소에 시행되는 지역별 교육종단연구는 학생의 성장 및 발전을 진단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는 교육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최준렬 외,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정책 결정자와 교육 현장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소는 교육 전문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최준렬 외, 2021).

따라서 교육정책연구소는 연구 기획, 정책 개발, 데이터 분석, 평가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에 따라 조직이 구성된다.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연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 연구 기획은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와 방법론을 수립하며, 정책 개발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최종 제안을 만든다. 데이터 분석은 교육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 및 모니터링은 정책의 실행 여부와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도모한다. 이러한 조직은 연구소의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연구 결과의 품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소는 또한 외부 전문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의 깊이와 범위를 넓히고, 국내 교육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교육정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정재균, 2017; 이상철 외, 2018; 박수정 외, 2024; 민윤 외, 2018;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양성관, 2019; 최준렬 외,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최근 연구

최근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의 질적 향상,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첫째, 교육정책연구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교육 현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비대면 교육과 원격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연구소는 에듀테크,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 분석, 디지털 학습 환경의 개선 방안, 비대면 교육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 문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혁신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기술을 교육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습 성과 예측, AI 디지털교과서, 스마트 교실 도입,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셋째, 지방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도 주요 연구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교육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 작은 학교 모델,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교육 강화, 지방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 제고를 위한 진학지도 및 지원 정책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도 주목할 만한 최근 연구 중 하나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취약계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저소득, 장애, 다문화 및 탈북 청소년), 학교급식 및 교복 지원 정책, 늘봄 학교 등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방안 모색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장기적인 성장·발달 과정과 학업 성취 수준을 추적하여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종단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동안의 사회적 지지, 학습 및 학교 지원 등의 다양한 외부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교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심리정서, 진로, 관계성, 학업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교육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여섯째, 위기학생 지원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도 최근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흡연 및 음주 예방,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의 예방적 접근은 물론, 사회정서역량 강화, 심리적 소진 예방, 정신건강 역량 강화와 같은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연구들은 교육정책연구소가 교육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는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연구 진행, 지역별 교육정책의 연계 강화, 교육정책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에는 공동연구 과제 수행, 연구 성과 발표, 교육정책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이 포함된다. 정기적인 실무자 협의회와 연구자 회의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진하며, 네트워크의 운영과 연구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b).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에서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공동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2>와 같다(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b). 첫째, 교육자치와 행정 혁신 분야에서는 단위학교 자치 실태, 지방교육정부 기능개편 방안, 교육자치 강화,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 및 학력과 관련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지역적 전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재개념화 및 측정지표 개발 등이 연구되었고, 이들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를 높이며 학습 지원의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었다. 셋째, 미래형 교육과 사회 변화에 대응한 연구로는 인구절벽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 농어촌 학교 발전, 평화 통일 교육,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 및 정서 변화, Z-세대 학생 특성 이해 등이 있었다. 넷째,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는 농산어촌 학교시설 복합화, 과대·과밀 학교 해소 방안 등이 진행되었고, 이들 연구는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원 정책에 대한 연구로는 교장공모제 내실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수급정책, 교육전문직 인사 제도 개선 등이 있었으며, 이는 교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시도였다.

〈표 II-2〉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공동연구 주제

연도	주제	책임	공동연구
18	단위학교 차치 실태 및 강화 방안	경기	참교육
	시도교육청권한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정부 기능개편 방안	부산	강원, 광주, 전북, 서울, 충북
	교장공모제 내실화 방안 연구	전남	강원, 제주, 인천, 경남
	고등학교 혁신의 관점에 따른 고교학점제의 가능성과 한계 탐색	강원	대구, 광주, 전북, 경북, 부산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지역수준 교육과정으로의 발전적 전환 방안 탐색	서울	전남, 경기, 충남, 세종, 참교육
19	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부산	강원, 제주, 충북, 충남, 서울, 대구
	평화 통일 교육과 남북교류 내실화 연구-교육 주체별 인식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참교육	경기, 인천, 광주
	미래형 농어촌 학교 발전 방안	경기	전남, 세종
	기초학력 재개념화에 관한 연구	경기	대전, 참교육
20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따른 교육전문직 선발·인사 제도개선 및 역할 기대 연구	강원	충북, 부산, 서울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한 교육정책 방향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충남
	기초학력 측정지표 개발 연구	경기수탁	
21	코로나 19 전후 학생들의 심리 및 정서 변화	경기	광주, 대전,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전국 단위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 개발	세종	강원, 대구, 울산, 제주, 참교육, 충북
22	농산어촌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강원	충북, 전남, 참교육, 울산
	Z-세대 학생 특성 이해	대구	전북, 서울, 대전, 경기, 경북
	과대, 과밀 학교 해소 및 지원 방안 연구	울산	광주, 인천, 제주
23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원의 요구도 분석	전북	서울, 충남, 경기, 제주, 대전, 울산
	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한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도 연구	전남	충북, 인천
24	시도교육청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분석 및 발전 방안	대구, 전북	울산, 대전, 충북, 경북, 인천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환경 현황 및 쟁점	울산	제주, 대전,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연구 이외에도 네트워크는 연례 교육정책 포럼, 연구성과 발표, 연구소 간 교류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교육정책 연구의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동은 국가 및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분석 틀

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편이나, 정부출연 공공기관 연구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평가 틀 또는 분석 틀이 다양한 조직 관리 이론과 공공 연구소 운영 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조직 이론, 성과 관리 이론, 재무 관리 이론은 연구소의 운영 목표 달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성과 평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분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임환 외, 2008; Scott, 2003; Kaplan et al., 1996; Cameron et al., 2013; 박수정 외, 2024; 이민형, 2001; 정황모 외, 2000; 이진용, 2008; 이철원, 1997).

먼저, 조직이론에서는 공공기관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cott, 2003; 정황모 외, 2000; Kaplan et al., 1996). 조직의 비전은 각 부서와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필수적이다(이철원, 1997; Kaplan et al., 1996; 민철구 외, 2013).

다음으로, 성과 관리 이론은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환류(feedback)하여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Cameron et al., 2013; 정양현 외, 2007; 류숙원 외, 2021). 이러한 성과 관리 시스템은 연구소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임환 외, 2008; 정양현 외, 2007; 이철원, 1997; Kaplan et al., 1996).

마지막으로, 재무관리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Brigham et al., 2013; 이민형, 2001; 김성수, 2000).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연구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연구 활동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공공 연구소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이 성과와 직결되므로, 재무 관리는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 할 수 있다(이상철 외, 2018; Link et al., 1998; 정황모 외, 2000; 이민형, 2001).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틀은 연구소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연구소의 전략, 운영, 성

과 관리, 재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소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첫째, 연구소 목적(비전) 및 전략 항목은 연구소의 운영 전략과 기본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비전과 목적, 그리고 전략의 명확한 정의는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기여한다(정양현 외, 2007;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이철원, 1997; 정황모 외, 2000). 특히, 법적 근거와 규정을 포함한 연구소의 소속 및 지위는 조직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연구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정재균, 2017; 임환 외, 2008; Oliver, 1991; 김재영, 2000; 양성관, 2019; 나민주 외, 2019; 장경숙 외, 2019; 조용래 외, 2020).

둘째, 운영 항목은 연구소의 연구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구성과 업무 비율을 분석하고자 설정되었다.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연구 성과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업무의 효율적 분배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민형, 2001; King et al., 2013; 김성수, 2000; 나민주 외, 2019; 장경숙 외, 2019; 이동규, 1993). 또한, 연간 연구물과 내부 주요 사업은 연구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정재균, 2017; 이진용, 2008; 민윤 외, 2018; 이철원, 1997).

셋째, 성과 관리 항목은 연구소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환류하는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성과 관리 시스템은 연구소가 외부 및 내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도구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Kaplan et al., 1996; Link et al., 1998; 류숙원 외, 2021; 김성수, 2000; 이민형, 2001; 임환 외, 2008). 이러한 환류 과정은 연구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사업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이민형, 2001; 정황모 외, 2000; 정재균, 2017; 이철원, 1997; 양성관, 2019).

마지막으로, 재무 항목은 연구소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분석 틀로 설정되었다. 연구소의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하고, 예산 증액 및 감액 내역을 검토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Weikart et al., 2013; 정황모 외, 2000; Link et al., 1998; 이민형, 2001).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연구소의 장기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통해 연구소는 연구 활동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이민형, 2001; 김성수, 2000; Brigham et al., 2013; 이상철 외, 2018).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구성된 분석 틀은 <표 II-3>과 같이 연구소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이철원, 1997; 정황모 외, 2000; King et al., 2013; 김성수, 2000; 나민주 외, 2019; Kaplan et al., 1996; Link et al., 1998; 류숙원 외, 2021; 이민형, 2001). 각 항목은 연구소의 운영 효율성, 성과 관리,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연구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3>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분석 틀

구분	기준 연구에 참고하여 재정의한 내용	교육정책연구소 현황 분석 내용
전략	❖ 연구소의 목적(비전) 달성을 위한 운영 전략	❖ 기본 방향(비전, 목적, 전략) ❖ 발전 계획 ❖ 법적 근거 및 규정 ❖ 소속 및 지위
운영	❖ 연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 및 내용	❖ 인원 구성 및 담당 업무 비율 ❖ 연간 연구물 ❖ 내부 주요 사업
성과 관리	❖ 연구소의 사업 성과 및 환류	❖ 외부 주요 사업 ❖ 사업 성과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재무	❖ 안정적인 재정 편성	❖ 예산 편성 현황 ❖ 예산 증액 및 감액 현황 ❖ 안정적인 예산 확보

III

운영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운영 현황

3. 소결



운영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 조직 및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하여 연구소별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진에서 운영 목적, 조직 현황, 인적 구성, 추진 사업, 연구 성과 등으로 조사지를 구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소 공식 명칭, 기본 방향(미션, 비전, 목적, 전략), 조직 현황(교육청 내 편제, 연구소 인원 구성), 최근 3년 예산, 2023년 사업 성과(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2023년 연구자별 연간 연구물 수, 2024년 사업 계획(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향후 발전 방안(전략), 운영의 법적 근거,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규정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부에서 각 시·도의 교육정책연구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자료 분석에 참고하기 위하여 2024년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계획을 함께 수집하였다. 조사 응답은 7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약 12일간 진행되었고, 조사지 및 2024년 연구소 운영 계획 자료는 연구책임자의 이메일로 회신 받았다.

각 시·도 교육정책연구소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연구진에서 일괄 종합하여 영역별 표로 정리하였다. 분석은 공통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연구소 중 특이점이 있는 경우 함께 기술하였다.

2. 운영 현황

가. 교육정책연구소 기본 방향

먼저 시·도별 교육정책연구소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미션, 비전, 목적, 전략을 살펴본 결과, 연구소별로 기본 방향의 설정 체계는 다르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공통됨을 확인하였다. 지역별 교육정책연구소는 공통적으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를 표방하고 있다. 다른 용어로는 “정책연구플랫폼”과 “연구의 허브(HUB)” 등으로도 명시되는데, 즉 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미션과 비전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목적과 전략 수립에 있어 현장 기반, 현장 중심, 현장과의 소통 등 현장지향적 연구 수행을 추구하고 있다. 다수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교육현안 분석 및 현장 지향적 교육정책 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천적인 교육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연구 수행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evidence-based)에 근거한 자료 조사 및 수집·분석을 제시하고 있고, 교육공동체를 비롯하여 정책연구 수행과 관련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협력적 연구 수행을 지향하고 있다.

〈표 III-1〉 교육정책연구소 기본 방향(비전, 목적, 전략)

구분	미션	비전	목적	전략
강원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교육정책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현안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
경기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여 경기 교육 발전에 기여	증거 기반의 교육 정책 지원 전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체계성 및 정책 기여도 강화 • 수요 중심의 정책 지원 및 협력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성과 지원 강화 • 지속가능한 고객만족 혁신 경영
경남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개발	경남교육의 가치와 역량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교육현장에 도움되는 교육정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공모를 통한 교육 현안 중심의 연구 과제 설정 • 제안·연구·정책 일체화를 위한 교육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 현장과 소통하는 실천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경북	창의와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 연구·현장 지원	현장중심의 실천적 교육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현장연구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자체 현장 연구 과제 수행 • 교육 현장과 밀접한 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 및 신규 정책 개발 •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 국내외 교육동향 분석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의 방향 제시
광주	현장기반 연구 중심의 광주교육 THINK T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기반 교육 정책 연구 및 개발 • 광주교육 현안과제 및 성과분석을 통해 광주교육 발전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 • 교육정책 연구 협력체제 구축 • 교육포럼 개최
대구	미래역량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정책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현안 분석 및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교육정책 방향 제시 • 정책연구 데이터에 기반한 중장기 대구교육정책 제안 • 교육정책 효과성 분석 및 결과 공유를 통한 교육공동체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에 기반한 정책연구를 통해 대구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지원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연구소 운영 • 교육정책 연구결과 공유 활성화 • 실행 연구 역량 개발 강화를 통한 학교현장 지원형 학습연구년제 정착
대전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Think Tank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현장 중심」 실천적 교육정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책의 체계적·전문적 연구·개발을 통한 대전교육 발전 도모 • 교육현안과 국내외 교육정책 분석을 통한 대전미래교육 방향 제시

구분	미션	비전	목적	전략
부산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의 싱크탱크 (Think Tank)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의 싱크탱크 (Think Tank)	•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부산교육정책 연구	• 부산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및 학교 현장 지원 • 사회적·시대적 환경과 정책적 요구에 근거한 자료조사·수집·분석 •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인식 확산을 통한 정책연구 추진
서울	서울교육의 역량과 가치를 선도하는 싱크탱크(Thi nk Tank)	공존의 혁신미래 교육을 구현하는 서울교육정책 연구	•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 연구	• 서울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및 학교 현장 지원 • 증거기반(evidence-based)에 근거한 자료조사·수집·분석 • 교육공동체 집단지성을 활용한 상향식 교육정책 지향 •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의 탁당성·공정성·신뢰성 제고
세종	정책연구 플랫폼	실천·정책·연구의 선순환을 통한 교육주체의 성장과 세종 교육력 제고에 기여	• 연구과제별 전문가 연계 • 교육청 정책역량 강화 지원 • 교육청 부서 협업 및 피드백	• 정책연구 • 현장연구회 • 학습연구년 교사 지원 • 정책세미나, 포럼
울산	울산교육의 방향과 역량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Think-Tank)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혁신 의제와 정책 연구·개발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울산 교육 정책 연구 및 개발 • 울산 교육 정책 연구 성과 공유 및 연구 자료의 지속적 DB화 • 교육 정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현장 지향 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체제 구축 • 교육공동체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상향식 접근 • 증거 기반 교육 정책 연구 및 성과 공유
인천			• (목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개발	• 현장 지향적 연구협력체제 구축 및 교육정책 개발·분석
전남	데이터 기반 현장 맞춤형 미래교육 정책개발	전남교육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의 허브(HUB)	• 현장중심 교육정책 개발 • 교육현안 분석 및 정책 평가 • 연구역량 및 협력 강화	• 교육현안과 정책 분석을 통한 연구 기반 조성 • 교육혁신을 위한 현장 중심 교육정책 평가 및 개발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 교육희망포럼 등 교육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전북	교육정책연구 개발, 교육동향 분석과 소통,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전북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의 방향, 정책 및 사업 관련 종합적 연구 수행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교육 현장에 공유하고 홍보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정책의 변화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제언 • 교육 자료 및 통계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 토대 마련	•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을 통한 미래교육 방향 제시 • 교육동향 분석과 소통을 통한 현장밀착형 연구 수행 •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교육협력 생태계 구축

구분	미션	비전	목적	전략
제주	제주의 미래교육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제주교육 정책 연구 추진 • 교직원의 연구 역량 강화 및 공동 연구 추진을 통한 제주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수행 • 교육정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이론과 교육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사 인력 충원과 교사 파견을 통한 연구센터 연구인력 확보 • 연구원으로 파견된 교사들의 개별 및 공동 연구 추진 • 연구 결과 적용 방안 및 맞춤형 지원 방안 공동 모색 • 연구 주제별 사업 부서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시스템 구축 • 전국 교육정책연구소와의 교류 증진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 연구 결과 보고회, 포럼 등을 통한 연구 내용 일반화
충남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준비하는 디딤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책 상시 분석 •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정책 연구 • 미래지향적 충남 교육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현안과 정책 분석을 통한 실천적 교육정책 연구 기반 조성 • 현장과 소통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연구 •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충남교육과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충북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Think Tank	충북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미래 교육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선도적 연구 수행 • 촉진성-충북교육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연구 수행 • 협력성-교육의 주체들과 상생하는 소통 체제 마련 • 지역성-충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 수행 • 전문성-정책연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방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교육을 주도하는 정책연구 • 정책과 현장을 잇는 연구성과 공유 •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현장연구활동 지원 • 교육과정 맞춤형 인정도서 개발 지원 • 교육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나.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운영 예산 편성

다음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연구소별 운영 예산 편성을 확인하였다. 2022년 대비 2024년 운영 예산은 경기, 부산, 서울, 전북을 제외하고 대부분 증액되었다. 2023년 대비 2024년 운영 예산이 증액된 곳은 10곳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등 일부 비목에서 예산이 증액되었거나 교육종단연구 수행을 시작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2023년 대비 2024년 운영 예산이 감액된 연구소는 7곳이었다. 대표적으로 경기의 경우 연구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였고 경북은 인성인문학센터 운영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종단연구가 폐지되면서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고, 서울은 교육정책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다. 세종 역시 정책연구 수행 예산이 절반 이상 감액되었고, 끝으로 충북은 교육자료개발보급 예산은 증액된 반면, 교육연구 운영지원 예산은 감액되었다.

〈표 III-2〉 교육정책연구소 최근 3년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사업별 운영비							비 고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강원			강원교육정책 연구	강원교육정책 포럼운영	교육연구정보 지발간	대학과의협력 연구	정책사업평가 운영	
2022년	571,001	167,002	14,587	49,410	307,086	32,916		
2023년	518,125	182,493	17,990	52,110	196,367	69,165		
경기	2024년	737,494	197,661	19,770	58,000	374,190	87,873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비 고
			연구사업비	연구원운영경비	예비비			
	2022년	6,135,000	2,603,000	3,532,000	45,000			
	2023년	6,980,000	3,268,000	3,712,000	20,000			
	2024년	3,773,000	1,537,000	2,236,000	0			

구분		사업별 운영비							
경남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비 고
			연구과제 수행	현장연구 회 지원	포럼 및 토론회	연차 보고회	종단 연구	정책자료 집 발간	
	2022년	352,755	113,264	40,200	8,547	17,629	165,165	7,950	-
	2023년	443,452	149,080	46,000	8,676	19,108	209,720	10,200	668
경북	2024년	487,756	184,950	41,600	31,950	8,418	183,528	34,710	2,600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비 고
			정책연구	경북국제포럼	종단연구	국외교육동향	인성인문학센터		
	2022년	584,180	155,990	11,580 (*경북포럼)	0	20,280	396,330		
광주	2023년	790,760	182,360	179,590	62,700	33,130	332,980	*국제포럼	
	2024년	653,340	177,190	102,090	158,150	32,360	183,550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비 고
			교육정책연구과제수행	이슈페이퍼제작	광주교육포럼	국제포럼운영			
대구	2022년	96,192	72,121	11,000	13,071		-		
	2023년	147,874	20,542	8,318	6,381	112,633			
	2024년	259,305	69,419	14,200	7,984	111,450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비 고
대전			교육정책연구개발	교육데이터연구소 운영	교육정책토론회 및 포럼 운영				
2022년	446,736	304,748	50,888	91,100					
2023년	503,256	324,469	78,787	100,000					
2024년	541,749	379,468	62,281	100,000					
부산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비 고
			정책연구, 현안분석	역량강화, 네트워크 사업	홍보, 연차보고회	유레카, RISS 지원			
	2022년	383,055	331,540	15,660	7,855	28,000			
	2023년	510,501	440,234	27,417	14,850	28,000	종단연구		
	2024년	491,704	424,004	22,540	16,660	28,500			

구분	사업별 운영비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비고
		교육정책연구	국내외학술교류	서울교육 종단연구	서울국제교육 포럼	혁신미래교육 연구소운영	
서울	2022년	2,185,834	576,585	99,750	671,704	128,840	708,955
	2023년	2,389,437	703,585	114,750	794,834	129,000	647,268
	2024년	1,807,987	241,758	39,100	747,218	202,700	577,211
세종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비고
			정책연구	정책연구공유	연구소운영경비	현장연구회	
	2022년	308,073	170,590	22,240	-	115,243	
	2023년	720,800	390,514	30,580	179,456	120,250	
	2024년	421,730	154,980	70,050	81,300	115,400	
울산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비고
			교육정책 연구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연구발표	교육정책 연구소운영	
	2022년	242,980	154,010	14,000	44,995	29,975	
	2023년	267,950	178,440	8,780	51,915	28,815	
	2024년	545,292	454,560	11,526	49,006	30,200	
인천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교육정책 연구	교육정책 연구지원	인천교육포럼 운영	교육정책 연구구두례 운영	미래교육 위원회 운영
	2022년	557,082	95,000	96,556	37,238	45,284	116,624
	2023년	663,200	78,360	113,832	48,038	45,284	141,886
	2024년	725,756	90,840	76,570	36,638	43,484	126,994
전남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HRD, 국외출장	정책분석 및 연구과제 개발	이슈&정책 (정책소식지)	여론 조사	희망 포럼
	2022년	321,900	9,940	223,830	24,480	15,000	12,140
	2023년	388,750	59,800	253,480	24,480	15,000	12,280
	2024년	416,690	73,200	254,430	24,480	15,000	13,680
전북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교육정책분석	미래교육 정책연구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연구 프로젝트	부서운영경비
	2022년	215,875	9050	157059	15212	34554	-
	2023년	200,316	11,900	82,458	29,502	40,808	35,648
	2024년	202,426	108,786	45,828	11,382	폐지	36,430

구분	사업별 운영비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제주			교육정책연구		교육홍보자료제작
2022년	-	-	-		
2023년	99,852	56,690	43,162		
충남	2024년	185,188	120,992	64,196	
	구분	예산총액	사업별 운영비		
			교육정책연구개발	교육정책토론회 및 포럼 운영	학습연구년(재배정)
충북	2022년	259,360	182,960	76,400	250,000(50명)-별도
	2023년	231,520	165,260	66,260	250,000(50명)-별도
	2024년	298,360	235,500	62,860	300,000(60명)-별도

다. 인원 구성 및 담당 업무 비율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우 그 특성상 인원 구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지역별 연구소 정원은 대략 10명 내외(학습연구년 교사 제외)이며 가장 많은 곳은 서울(14명)이었다. 장학관이 2명인 곳은 서울과 부산이었고,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인 연구(위)원이 많은 곳은 서울과 전북이었다. 연구(위)원이 없는 지역으로는 광주, 제주, 충남, 충북이 있는데, 담당 업무 비율을 살펴보면 제주의 경우에는 과견교사가, 광주, 충남, 충북은 학습연구년 교사가 연구 수행을 담당하고 있었다.

직위별 담당 업무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의 경우 대부분 행정의 비중이 컸는데 전남은 교육연구관(장학관)을 비롯하여 교육연구사(장학사), 연구(위)원, 과견교사, 학습연구년 교사 모두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고 주무관 3명이

행정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구사(장학사) 역시 행정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위)원이 없는 광주의 경우에는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견교사와 학습연구년 교사의 경우에는 연구 수행 비중이 커졌고, 주무관 및 기타 인력(서울 및 충남)은 행정 수행 비중이 커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정원 49명(원장 제외) 중 연구직이 35명으로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직이 15명으로 약 30% 구성되어 있다. 연구직은 크게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및 부연구위원,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직은 1급부터 5급까지 배치되어 있다.

〈표 III-3〉 교육정책연구소 인원 구성 및 담당 업무 비율

구분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연구(위)원		주무관		파견교사		학습연구년 교사		기타		합계
	연구	행정	연구	행정	연구	행정	연구	행정	연구	행정	연구	행정	연구	행정	
강원	업무 비율(%)	0	100	50	50	100	0	0	100	-	-	-	-	-	
	현원(N)	1		4		3		2		-		-		-	10
구 분 원 장															
경기	정원	1	35	3		26		6	14	1	1	2	10	50	
	현원	1	30(6)	1		24(6)		5	13(5)	1	1(1)	1(1)	10(3)	44(11)	
	결원	-	△5	△2		△2		△1	△1	-	-	△1	-	△6	
	주. 괄호안의 숫자는 경기도교육청 파견 직원 및 연구사를 뜻함														
경남	업무 비율(%)	0	100	0	100	90	10	0	100	90	10	-	-	-	
	현원(N)	1		2		4		1		2		-		-	10
경북	업무 비율(%)	20	80	30	70	90	10	10	90	-	-	-	-	-	
	현원(N)	1		3		1		3		-		-		-	8
광주	업무 비율(%)	30	70	70	30	-	-	0	100	-	-	100	0	-	
	현원(N)	1 (비상주)		1		-		1 (비상주)		-		10		-	11(2)
대구	업무 비율(%)	0	100	30	70	90	10	10	90	90	10	100	0	-	
	현원(N)	1		4		3		2		1		17		-	28

구분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연구(위)원		주무관		파견교사		학습연구년 교사		기타		합계
		연구	행정	연구	행정	연구	행정	연구	행정	연구	행정	연구	행정	연구	행정	
대전	업무 비율(%)	0	100	40	60	90	10	0	100	70	30	100	0	-	-	
	현원(N)	1		2		2		1		2		6		-		14
부산	업무 비율(%)	55	45	39	61	100	0	22	78	100	0	-	-	-	-	
	현원(N)	2		2		2		4		1		-		-		11
서울	업무 비율(%)	0	100	0	100	90	10	0	100	-	-	90	10	0	100	
	현원(N)	2		3		7		1		-		2		1		16
세종	업무 비율(%)	30	70	30	70	90	10	0	100	-	-	100	0	-	-	
	현원(N)	1		1		2		1		-		3		-		8
울산	업무 비율(%)	20	80	35	65	80	20	0	100	-	-	-	-	-	-	
	현원(N)	1		3		4		1		-		-		-		9
인천	업무 비율(%)	50	50	50	50	100	0	0	100	0	100	-	-	-	-	
	현원(N)	1		3		3		1		1		-		-		9
전남	업무 비율(%)	100	0	100	0	100	0	33	64	100	0	100	0	-	-	
	현원(N)	1		2		4		3		3		9		-		22
전북	업무 비율(%)	0	100	0	100	100	0	0	100	0	0	100	0	-	-	
	현원(N)	1		1		6		1		0		3		-		12
제주	업무 비율(%)	0	100	40	60	-	-	-	-	100	0	-	-	-	-	
	현원(N)	1		1		-		-		3		-		-		5
충남	업무 비율(%)	0	100	30	70	-	-	0	100	95	5	100	0	0	100	
	현원(N)	1		2		-		1		3		60		1		68
충북	업무 비율(%)	0	100	50	50	-	-	0	100	-	-	100	0	-	-	
	현원(N)	1		4		-		2		-		46		-		53

라. 연구자별 연간 연구물 수(2023년)

다음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연구자별 연간 연구물 수를 확인하였다. 전체 평균값을 보면 연구보고서(책임) 수량은 2권 내외이며, 최대 2.5권(경남), 최소 0권(부산)인 곳도 있다. 쪽수는 0쪽인 부산을 제외하고, 최소 60쪽(충북)에서 최대 312.5쪽(서울)까지 분포가 넓은 편이다. 연구보고서(공동)의 경우 수량은 대략 1권 내외이며, 이슈페이퍼 및 소식지 수량은 경북 20권을 제외하고 최대 5.8권(전북), 쪽수는 최대 55.2쪽(울산)으로 나타났다.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은 연구(위)원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구보고서(책임) 수량의 경우 부산 0권을 제외하고 대체로 1~3권 내외로 발간하고 있었다. 강원의 경우 연구위원2가 5권을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쪽수는 50쪽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연구보고서(책임)의 쪽수는 최소 60쪽(충북)에서 최대 323.7쪽(서울)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공동) 수량은 보통 1~2권 내외였고, 이슈페이퍼 및 소식지 수량은 최대 5.8권(전북), 쪽수는 최대 49쪽(울산)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연구사(장학사)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원, 경기, 대구, 서울, 제주, 충남의 경우 교육연구사(장학사)가 연구보고서(책임)를 발간하였는데, 이중 서울은 2023년에 한시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통 1~2권 내외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쪽수는 최소 75쪽(강원)에서 최대 234쪽(서울)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공동)의 경우에는 경기,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인천, 제주, 충북에서 연구물을 발간하였고, 이슈페이퍼 및 소식지 작성은 경기, 대구, 대전, 울산, 제주, 충북, 기타에는 경기, 세종, 제주 등이 연구물을 발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전남의 경우 주무관이 연구물을 발간하였는데, 책임연구로 1건, 기타 2건을 수행하였다.

〈표 III-4〉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자별 연간 연구물 수(2023년)

(분량 단위: 쪽, 수량 단위: 건)

구분	연구보고서 (책임)		연구보고서 (공동)	이슈페이퍼, 소식지		기타		비고
	한 건당 평균 분량	수량	수량	한 건당 평균 분량	수량	한 건당 평균 분량	수량	
강원	연구(위)원1	200	3	0	0	0	0	
	연구(위)원2	50	5	0	0	0	0	
	연구(위)원3	100	1	0	0	0	0	
	연구(위)원 평균	116.7	3.0	0	0	0	0	
	교육연구사1	100	1	0	0	0	0	
	교육연구사2	100	2	0	0	0	0	
	교육연구사3	50	2	0	0	0	0	
	교육연구사4	50	2	0	0	0	0	
	교육연구사 평균	75.0	1.8	0	0	0	0	
	전체 평균	92.9	2.3	0	0	0	0	
경기	연구(위)원1	0	0	3	4	1	0	
	연구(위)원2	287	2	1	0	0	92	4
	연구(위)원3	353	4	1	5	2	3.3	6
	연구(위)원4	280.7	3	1	0	0	3.5	2
	연구(위)원5	199.5	4	5	5	2	3.3	7
	연구(위)원6	135.3	4	0	4	1	3.3	4
	연구(위)원7	193.7	3	0	0	0	3.3	5
	연구(위)원8	210	2	0	0	0	4	3
	연구(위)원9	150	2	1	0	0	48	4
	연구(위)원10	60	1	0	0	0	3	1
	연구(위)원11	120.5	2	1	0	0	4	4
	연구(위)원12	165	3	4	0	0	3.3	3
	연구(위)원13	192.5	2	0	0	0	3	3
	연구(위)원14	172	1	2	0	0	4	1
	연구(위)원15	162.8	4	3	0	0	4	6
	연구(위)원16	0	0	1	0	0	0	0
	연구(위)원17	274	2	1	4	1	5	4
	연구(위)원18	94.5	4	1	0	0	3.3	4
	연구(위)원19	193.5	2	0	0	0	3.5	2
	연구(위)원20	187.5	2	3	0	0	3.5	2
	연구(위)원21	141	1	0	6	1	3	1
	연구(위)원22	44	1	3	0	0	3	1
	연구(위)원23	213.5	2	2	6	1	3	2
	연구(위)원24	198	1	3	6	1	3	1
	연구(위)원25	0	0	1	0	0	0	0
	연구(위)원26	0	0	3	0	0	0	0
	연구(위)원27	0	0	4	0	0	0	0
	연구(위)원28	0	0	2	0	0	0	0
	연구(위)원 평균	183.1	1.9	1.6	8.0	0.4	9.5	2.5

구분	연구보고서 (책임)		연구보고서 (공동)	이슈페이퍼, 소식지		기타		비고
	한 건당 평균 분량	수량		수량	한 건당 평균 분량	수량	한 건당 평균 분량	
경기	교육연구사1	272	3	0	0	0	4	4
	교육연구사2	144.3	3	0	4	1	3.3	3
	교육연구사3	163.3	3	1	0	0	3.3	3
	교육연구사4	285	2	1	13	5	3	1
	교육연구사5	200	2	1	4	1	3.5	2
	교육연구사6	159.5	2	0	0	0	3.5	2
	교육연구사7	258	2	1	0	0	3.5	2
	교육연구사 평균	211.7	2.4	0.6	3.0	2.3	3.4	2.4
경남	전체 평균	190.0	2.0	1.4	5.5	0.5	8.0	2.5
경북	연구(위)원1	119.5	2	0	12	2	0	0
	연구(위)원2	177.5	2	0	8	2	0	0
	연구(위)원3	172	2	0	12	2	0	0
	연구(위)원4	100	9	0	8	2	0	0
	연구(위)원 평균	162.9	2.5	0.0	10.0	2.0	0.0	0.0
광주	전체 평균	162.9	2.5	0.0	10.0	2.0	0.0	0.0
대구	연구(위)원1	314	1	0	0	0	0	0
	연구(위)원 평균	314	1	0	0	0	0	0
	교육연구사1	0	0	0	2	48	0	0
	교육연구사2	0	0	0	56	12	0	0
대전	교육연구사 평균	0	0	0	0	0	0	0
	전체 평균	314	0.3	0	29	20	0	0
광주	연구(위)원1	70	2	2	12	1	0	0
	연구(위)원2	71.5	2	2	12	1	0	0
	연구(위)원3	71.5	2	2	10	2	0	0
	연구(위)원 평균	71	2	2	11.3	1.3	0	0
대구	전체 평균	71	2	2	11.3	1.3	0	0
대전	연구(위)원1	336	3	5	4	3	0	0
	연구(위)원2	380	1	2	4	1	0	0
	연구(위)원3	231	3	0	4	3	0	0
	연구(위)원 평균	315.7	2.3	2.3	4	2.3	0	0
대전	교육연구사1	200	2	0	0	0	0	0
	교육연구사2	119	1	0	4	1	0	0
	교육연구사3	198	1	2	4	2	0	0
	교육연구사4	231	1	0	4	1	0	0
	교육연구사 평균	187	1.3	0.5	4	1.3	0	0
대전	파견교사1	183	1	3	4	1	0	0
	파견교사 평균	183	1	3	4	1	0	0
	전체 평균	205.9	1.6	1.5	4	1.5	0	0
	연구(위)원1	250	2	0	40	1	0	0
	연구(위)원2	250	2	1	40	1	10	1
대전	연구(위)원 평균	250	2	0.5	40	1	10	0.5
	연구교사1	250	1	1	40	1	10	1
	연구교사2	250	1	1	40	1	10	1
	연구교사 평균	250	1	1	40	1	10	1

구분	연구보고서 (책임)		연구보고서 (공동)	이슈페이퍼, 소식지		기타		비고	
	한 건당 평균 분량	수량	수량	한 건당 평균 분량	수량	한 건당 평균 분량	수량		
대전	교육연구사1	0	0	1	40	1	0	0	연구협력 4건
	교육연구사2	0	0	0	40	1	0	0	연구협력 2건
	교육연구사 평균	0	0	0.5	40	1	0	0	
	전체 평균	250	1.5	0.7	40	1	10	0.5	
부산	연구(위)원1	0	0	0	30	3	10	6	
	연구(위)원2	0	0	0	30	3	10	5	
	연구(위)원 평균	0	0	0	30	3	10	5.5	
	전체 평균	0	0	0	30	3	10	5.5	
서울	연구(위)원1	344	1	0	0	0	9.3	3	
	연구(위)원2	227	2	1	49	1	7	2	
	연구(위)원3	204	2	0	25	1	8	9	
	연구(위)원4	230	2	0	15	1	7	2	
	연구(위)원5	411	2	0	22	1	4	1	
	연구(위)원6	242	2	0	27	1	4	1	
	연구(위)원7	608	2	0	0	0	0	0	
	연구(위)원 평균	323.7	1.9	0.1	27.6	0.7	6.6	2.6	
	교육연구사1	234	1	0	0	0	0	0	
	교육연구사2	0	0	1	0	0	0	0	
세종	교육연구사3	0	0	1	0	0	0	0	
	교육연구사 평균	234	0.3	0.7	0	0	0	0	
	전체 평균	312.5	1.4	0.3	27.6	0.5	6.6	1.8	
	연구(위)원1	170	2	1	19	1	0	0	
	연구(위)원2	199.3	3	0	0	0	0	0	
울산	연구(위)원 평균	184.7	2.5	0.5	19	0.5			
	교육연구관	0	0	1	0	0	0	0	
	교육연구사	0	0	2	0	0	118	1	
	교육연구사 평균	0	0	1.5	0	0	118	0.5	
	전체 평균	185	1.3	1	19	0.3	118	0.3	
인천	연구(위)원1	446	2	2	58	1	0	0	
	연구(위)원2	168	2	2	40	1	7.5	2	
	연구(위)원3	230	1	2	0	0	8	2	
	연구(위)원 평균	281.3	1.7	2.0	49	0.7	7.8	1.3	
	교육연구사1	0	0	0	60	1	0	0	
	교육연구사2	0	0	0	79	1	0	0	
	교육연구사3	0	0	0	39	1	0	0	
	교육연구사 평균	0	0	0	59.3	1.0	0.0	0.0	
	전체 평균	281.3	0.8	1	55.2	0.8	7.8	0.7	
	연구(위)원1	161	2	1	0	0	47	1	
파견교사	연구(위)원2	214.3	3	0	0	0	8	1	
	연구(위)원3	139	1	0	0	0	0	0	
	연구(위)원 평균	184	2	0.3	0	0	18.3	0.7	
	파견교사1	282	1	0	0	0	0	0	
	파견교사2	155	2	0	0	0	0	0	
파견교사 평균	197.3	1.5	0	0	0	0	0	0	

구분	연구보고서 (책임)		연구보고서 (공동)	이슈페이퍼, 소식지		기타		비고
	한 건당 평균 분량	수량		수량	한 건당 평균 분량	수량	한 건당 평균 분량	
인천	장학사1	0	0	1	0	0	0	
	장학사2	0	0	1	0	0	0	
	장학사3	0	0	1	0	0	0	
	장학사 평균	0	0	1	0	0	0	
	전체 평균	188.4	1.1	0.5	0	0	18.3	0.3
전남	연구위원1	100	3	1	0	0	20	5
	연구위원2	110	2	1	12	1	20	3
	연구위원3	148	3	1	0	0	10	4
	연구위원4	250	1	3	0	0	0	
	연구(위)원 평균	152	2.25	1.50	12	0.25	17	3
전북	주무관(행정연구)	120	1	0	0	0	10	2
	주무관 평균	120	1	0	0	0	10	2
	전체 평균	136	1.63	0.8	12	0.2	13.5	2.8
	연구(위)원1	0	0	0	17	3	0	23.8.1.임용
	연구(위)원2	150	2	1	30	2	0	0
제주	연구(위)원3	130	2	0	1	20	0	0
	연구(위)원4	120	2	0	25	4	0	23.5.8.임용
	연구(위)원5	0	0	0	0	0	0	24년 임용
	연구(위)원 평균	80	1.2	0.2	14.6	5.8	0	0
	전체 평균	80	1.2	0.2	14.6	5.8	0	0
충남	파견교사(연구원)1	150	2	1	4	4	4	1
	파견교사(연구원)2	150	2	1	4	4	4	1
	파견교사(연구원)3	150	2	1	4	4	4	2
	연구원 평균	150	2	1	4	4	4	1.3
	장학사1	150	1	2	4	4	4	1
충북	장학사 평균	150	1	2	4	4	4	1
	전체 평균	150	1.5	1.5	4	4	4	1.15
	파견교사1	182	2	1	0	0	0	0
	파견교사2	209	2	0	0	0	0	0
	파견교사3	298	2	0	0	0	0	0
전체	파견교사4	144	2	0	0	0	0	0
	파견교사 평균	208.3	2	0.3	0	0	0	0
	교육연구사1	197	2	0	0	0	0	0
	교육연구사 평균	197	2	0	0	0	0	0
	전체 평균	202.6	1.7	0.2	0	0	0	0
전체	연구(위)원1	60	1	0	20	1	0	0
	연구(위)원 평균	60	1	0	20	1	0	0
	교육연구사1	0	0	1	0	0	0	0
	교육연구사2	0	0	0	30	1	0	0
	교육연구사 평균	0	0	0.5	30	0.5	0	0
전체	전체 평균	60	0.3	0.3	25	0.7	0	0

마. 2023년 사업 성과

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정책연구소별 사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사업 성과 영역은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책연구 및 개발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연구와 정책연구, 수시연구 및 현안연구 등이 수행되었고, 위탁연구 및 협력연구, 현장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형태의 현장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정책연구 및 개발 영역에서 연구소마다의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데이터 연구소 운영, 전남과 충북은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 발표 한마당 운영, 전남은 교육 여론조사 운영, 대전과 전북의 학술 콜로키움 운영 등이 있다.

다음으로 현안 분석 및 제언 영역을 살펴보면, 주로 국내외 동향 분석, 이슈페어 또는 브리프 발간, 연구 및 정책 홍보를 위한 웹진, 카드뉴스 등을 발간하고 있었다. 또한 포럼, 학술대회, 토론회,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가 운영되었는데, 경북, 광주, 서울의 경우에는 국제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대전의 경우 대전교육정책워크숍, 전문적학습공동체, 대전교육정책학생모니터단, 학생 정책토론회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산은 교육전문직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끝으로 연구 협력 및 연대 영역에서는 모든 연구소가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외 현장 네트워크, 즉 연구 관련 자문단 및 지원단 등을 운영하였다. 국내 대학과의 교류나 학회 학술대회 참석 등 학술교류도 실시하였고, 부서 협력을 위한 토론회 운영이나 정책 담당자 대상의 학습조직을 운영하는 등 정책 및 부서 관련 교류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소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도 이루어졌다. 한편, 경북의 경우 인성인문학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있었다.

〈표 III-5〉 교육정책연구소 2023년 사업 성과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강원	정책연구 수행	정책연구 16과제 수행	연찬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연구 수행 -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원의 요구도 분석 전국교육정책연구소 협의회 및 상·하반기 워크숍 참석 	
	위탁연구	전문기관 협력연구 13과제 수행	착수, 중간, 결과발표회	연구 과제별 착수, 중간, 결과발표회			
	기본연구	기본연구 5건 수행	경기교육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교육포럼 4회 운영 온·오프라인 병행 			
경기	정책연구	정책연구 17건 수행	경기교육데이터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교육종단연구 및 경기학교교육실태조사 결과 활용 학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원의 요구도 분석 전국교육정책연구소 협의회 및 상·하반기 워크숍 참석 	
	수시연구	수시연구 41건 수행 - 현안보고 17, 이슈페이퍼 17, 기술보고 7건	미래교육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교직원 대상 미래교육 시리즈 특강 실시(4회) 			
	수탁연구	• 수탁연구 6건 수행	교육시선오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2회 발간 			
			현장네트워크 (경기교육e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지원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 교원대상 현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소식지 '경기교육e음'을 총 4회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가치 제고 및 확산을 위해 경기교육포럼을 4회 운영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2023.06.29.)에서 연구원 기관세션 운영 	
			경기교육 통계브리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간행물 배포(5회) 			
경남	기본연구과제 선정 및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보고회 실시 및 연구보고서 발표(10개) 연구보고서 발간 및 사이버도서관 탑재 	경남교육정책 홍보 및 현안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슈페이퍼 '경남교육 정책 지금' 발간 오피니언 페이퍼 '이슈+생각' 발간 트렌드페이퍼 '동향' 발간 '통계로 보는 종단연구' 발행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특별연수 교사 및 현장연구회 책임연구원 및 연구협력관 지정 연구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컨설팅 실시 요청학교 및 기관 컨설팅 	
	경남교육 종단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차년도 종단연구 실행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표(9개) 	교육정책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교육정책포럼 운영 - 정책연구 수행형, 교육현안토론형, 초청강연형 등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대표 및 실무자 협의회 참가 및 소통 체계 확립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워크숍 참가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경북	교원 특별연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연구형, 현장지원형 교원 특별연수 교사 대상 연수 운영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발표(23개) 		연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참석 국내외 교육기관 방문 학회 가입 및 참석, 논문 게재 등
	위탁연구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빅데이터 적용 중등학교 인지적 평가 활용 방안 연구 외 2건 	경북국제교육 포럼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협의회, 공동워크숍 참여
	현장연구 1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IB프로그램 활용 방안 외 10건 	국내교육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교육청 및 연구소 등을 통해 발표되는 보고서 및 정책 동향 정보 정리(주 1회, 연간 52회차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인문학 통합시스템 운영 인성인문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위 학교 지원
	종단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교육종단연구 기초설계 연구 경북교육종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자체연구 	국외교육동향	인성인문학 센터(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선진국 8개국의 교육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월 1회) E-book으로 카드뉴스 홈페이지에 탑재 및 게시 공문과 내부메일로 안내
광주	학생 성장 및 적응체계 구축지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학생 정신건강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치유와 성장 중심의 교육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동향과 과제 	공감톡톡 <상반기 공동 배움자리-포럼> <하반기 공동 배움자리-공동연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교육정책 성과 홍보 및 공유, 효과적인 교육정책 담론 및 실천방안 제시 기초 강연, 공동 연구 발표 역할별 회의(대표, 실무자, 연구원, 행정) 진행 기초 강연, 공동 연구 발표 역할별 회의(대표, 실무자, 연구원, 행정)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교육정책연구 관련 수시 자문·컨설팅 실시 정책연구과제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참여
	지역 교육 과정으로서 광주 교육과정 방향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반 광주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탐색 스터디 카페형 365-스터디룸 현황 및 실태분석 	광주 교육정책 연구 포럼 광주교육 국제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 교육 동향과 교육정보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남을 통해 교육정책의 소통의 장 마련 다양한 강연 및 토론 세션 운영 - 해외 석학 초청 강연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대구	기본연구	기본연구과제 12건 수행	이슈페이퍼 발간	대구미래교육 창(窓) 13회 발간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분기별 협의회, 공동워크숍 참여
	위탁연구	위탁연구 3건 추진	대구미래교육 콘퍼런스	대구미래교육콘퍼런스 개최(주제: 대구미래교육, IB로 꽂고 피우다)		
	현장연구	현장연구 8팀 참여	대구교육 종단연구	대구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연구 수행, 교육부종단연구 3차년도 참여	학습연구년 제 특별연수 위탁운영	학습연구년 교사 미래교육역량 강화 연수 운영, 분야별 공동연구과제 수행(공동연구 14건, 이슈페이퍼 16건)
	데이터연구 소 운영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 교육, 데이터 아카이브 운영	대구교육 종단연구 학술대회	제4회 대구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12팀 참가)		
대전	기본연구 (자체연구)	자체연구(종단연구 포함) 6건	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4건 발간	대전교육정책연구 지원단 운영	정책연구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종단연구위원회, 자문단 운영
			교육동향	교육동향 12건 발간		
			대전교육 성과 통계분석 자료	「한눈에 보는 대전교육」 발간		
			대전교육정책 학술 콜로키움	지역대학 연계 학술 콜로키움 운영(2회)		
위탁연구	위탁연구 9건		대전교육 종단연구	대전교육종단연구 1, 2차 예비조사	대전교육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대전교육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연차보고회	대전교육종단연구 저널(영문판 포함, 연 2회) 온라인 시스템 구축		
			대전교육정책 워크숍	교육가족 대상 연차보고회 개최		
			전문적학습 공동체	4급(상당)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		
현장연구	학습연구년특별연수 교사 현장연구 2건(2팀)	대전교육정책연구 학생모니터단 현장연구 4건(4팀)	학생 정책토론회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전문적학습 공동체 운영(상시학습 60시간 인정)	교육발전특 구지원연구 단	대전교육발전특구 자문 및 검토
			소식지 발간	초·중·고 학생모니터단 운영(발대식, 역량강화 연수) (75명)		
			학생 정책토론회	대전미래교육박람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발굴한 정책의 입안 가능성 및 타당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소식지 발간	'DEPI 소식' 연 2회 발간	전국교육정책연구 네트워크	전국 공동연구 1건 수행, 전국 상반기 공동워크숍 개최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부산	위탁연구	위탁연구 2건 수행	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6건 수행	부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페이퍼 결과 공유를 위한 이슈토론회 운영(4회) 	
			보고서	부산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발간(2회)			
			웹진	부산교육 정책매거진 발간 및 웹진 공유(4회)			
			교육연구지원	교육정책자문단 및 현장 모니터단 운영(각5회)	자체역량강화 (기타)		
			세미나	상·하반기 교육정책세미나 등 운영(3회)			
			아카데미	부산교육전문직아카데미 개최(7월)			
			포럼	부산교육정책포럼 운영(11월)			
서울	기본연구	기본연구과제 14건 수행	이슈페이퍼 발간	이슈페이퍼 5건 수행	전국교육 정책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 워크숍 	
			현안분석	현안분석 1건 수행			
			글로벌 교육동향 및 글로벌 리포트 발간	글로벌 교육동향 4건, 글로벌 리포트 4건 발간			
	위탁연구	위탁연구 18건 추진	톺아보는 서울교육 발간	톺아보는 서울교육 6건 발간			
			서울교육 총단연구	서울학생총단연구, 서울교원총단연구 3차년도 연구 수행			
현장연구	현장연구	현장연구 15팀 참여	서울교육 총단연구 학술대회	제6회 서울교육총단연구 학술대회 개최(22팀 논문 발표)	학술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기관세션 운영 	
			교육연구 세미나	교육연구 세미나 개최 (기본연구과제 연계 7개 주제)			
	연차보고서 발간	2023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차보고서 발간	서울교육 정책포럼	서울교육정책포럼 개최	서울교육 연구년 워크숍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교육연구년 교사 연구 역량 강화 워크숍(연 4회), 연구보고서 컨설팅(연 4회), 연구과제 수행(단독연구 24건, 공동연구 2건) 	
			서울국제 교육포럼	서울국제교육포럼 개최			
			정책연구 발표회	2023 정책연구 발표회 개최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세종	정책연구	정책연구 4과제 수행	이슈페이퍼	2023년 세종교육 창(窓) 발간	정책연구회 운영	지정과제 17과제 운영		
	현안연구	현안연구 6과제 수행	포럼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정책연구 포럼 3회, 느린학습자 정책연구 토론회 1회	실천연구회 운영	교수·학습(34팀), 교육과정(17팀), 범교과(11팀), 생활교육(6팀), (총 68팀 844명)		
		교원특별연수(학습연구년) 2과제 수행			현장연구회 성과 공유	2023년 현장연구회(정책연구회, 실천연구회) 나눔회 -세종교육난장 운영		
	위탁연구	연구용역 3과제 수행, 13과제 관리	세종교육 정책세미나	방학 중에도 중단 없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해외사례)	능동적 정책 공유	세미나실(2실) 구축·운영·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각종 보고회, 협의회, 포럼 등 교육정책 숙의를 통한 능동적 정책 공유의 장 마련		
울산	자체연구	자체연구 과제 5건 완료	이슈페이퍼 발간	이슈페이퍼 5회 발행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분기별 협의회, 공동워크숍 참여		
			동향분석지 발간	동향분석지 2회 발행				
	현장연구	현장연구 과제 4건 완료	정책 세미나 운영	연 4회의 주제강연 및 정책토크 세미나 수행				
	위탁연구	2023 울산 교육정책 여론 조사 위탁 1건	울산교육포럼	울산교육포럼 연 1회 수행(주제:데이터 기반 교육의 미래, 울산교육종단연구)				
인천	연구과제 공모	울산 교육정책 연구과제 공모 1회 수행	연차보고회	제 5회 연차보고회 개최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협의회·공동워크숍·공동 연구과제 참여		
	기본연구	기본연구과제 7건 수행	교육정책 토론회	교육정책토론회 2회 개최				
	수시연구	수시연구과제 2건 수행						
	현장연구	현장연구과제 3팀 공모·운영						
전남	협력연구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연구과제 1건 수행	인천교육정책 연구 컨퍼런스	인천교육정책연구컨퍼런스 1회 개최	인천시정 연구 네트워크	협의회, 연구자문 참여, 시의회 정책소통토론회 개최		
	위탁연구	위탁연구과제 2건 수행						
	종단연구	종단연구과제 1건 수행						
전남	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	10개 연구과제 수행, 연차보고회, 찾아가는 정책연구과제 설명회 개최(2회)	전남교육 이슈& 정책 발간	교육시론, 정책연구, 이슈진단, 특별기획 등 교육현안 과제, 연 4회 발간 (3, 6, 9, 12월)	핵심역량 강화 (HRD)	월1회 연구소 구성원의 연구역량 강화 연수 활동 운영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전남	전남미래교육 (정책연구 과정) 특별 연수 운영	교사 12명 참여, 주2회 집합연수, 팀별 연구과제 수행	전남교육 종단연구 (6차년도) 및 학술대회 개최	• 패널1(중3), 패널2(고2) 학생 (인지, 정의, 사회적 변화 조사), 교원, 학부모 등 총 9,000여명 대상 설문조사 • 제1회 전남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9월)	전국교육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실무자협의회 및 공동워크숍 2회 참여, 네트워크 공동연구과제 수행
	전남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 마당 운영	중고 41팀 탐가, 13팀 본선 제안마당 발표, 교육감 표창, 제안서 책자 본청과 지역청 배포	전남교육 희망포럼	주제 '전남교육대전환, 전남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포럼 운영	전남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연구 협력을 위한 전남 지역 및 대학 교육연구기관 MOU 체결 및 공동포럼 운영
	전남교육 여론조사	전남교육정책 만족도, 전남 교육정책 방향 및 주요 정책 이해도 조사				
전북	교육정책 연구지 발간	전북교육정책연구지 '오늘' 발간(월1회, 총 12회)	교육동향분석	국내 교육동향 분석 20건	전국교육 정책연구소 네트워크	• 전국교육전북교육정책 연구소네트워크 공동연 구 수행 1건 • 전국교육전북교육정책 연구소네트워크 실무자 협의회 참석 4회 •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 트워크 공동연구 발표 및 워크숍 참여 2회
	콜로키움 운영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운영(월1회, 총 12회)	해외동향분석	해외논문 및 기사 요약 16건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9건		'콜로키움 현장지원단'	매월 1회 연구보고서 검토 지원	
	프로젝트팀 연구보고서	학교현장 프로젝트팀 연구 12건				
제주	기본연구	개인 연구과제 7건	월간 제주교육	매월 특집 기사 8회 투고	전국교육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분기별 협의회, 공동워크숍 참여
	공동연구	공동 연구과제 1건	카드뉴스 발간	2023년 5월~12월 매월 8회 발간		
	네트워크 연구	네트워크 공동연구 과제 1건	교육 포럼	교육 포럼 개최(주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상상 넘어 미래 교육을 探(탐)하다!)		
			상반기 연구 공개보고회	2023년 상반기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이학여대 미래교육 연구소 교류	공동연구 추진 및 협의회 운영
			미래교육 컨퍼런스	미래교육 컨퍼런스 개최(주제: 미래 교육 인사이트: 학교 교육의 현재와 미래 "미래의 교실,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것인가?")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충남	기본연구	기본연구과제 14건 수행	이슈페이퍼 발간	9회 발간(본청 정책기획과 협력-관학협력사업)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분기별 협의회, 공동워크숍 참여
	위탁연구	교육현안연구 6건 발간(본청 정책기획과 협력)	충남교육정책 마당(2회)	상반기-학생주도성, 담론에서 철학으로 하반기-학생중심 미래교육, 평가의 방향을 묻다		
	현장연구	현장연구 4팀 참여	충남 교육정책 토론회(1회)	지속가능한 삶을 전망하는 교육의 연대와 실행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위탁운영	학습연구년 교사 미래교육역량 강화 연수 운영, 개인 희망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충북	정책연구 용역 추진	정책연구용역 추진 26과제	충북교육 발간	1건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분기별 협의회, 상·하반기 공동워크숍 참여, 공동연구 수행
	현안과제 연구	현안과제 분석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연구 4과제 수행	교육정책 세미나 운영	3회(3,5월)		
	교학상장연 구회 운영	현안 중심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교학상장연구회 4팀 운영	교육포럼 개최	2회(1,12월)		
	교육연구회 공모·운영	150팀 팀별 5,000천원	교육정책아카 데미 운영	3회(2,3,11월)		
	충북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 발표 한마당 운영	1회(6~10월)	이슈와 동향 발행	국내·외 교육정책 공유를 위한 간행물 이슈와 동향 발행(월 2회)	충북교육정책 자문단 운영	충북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내외부 전문가 10명)

바. 2024년 사업 계획

2024년 교육정책연구소 사업 계획은 2023년 사업 성과와 영역을 동일하게 구분하여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로 살펴보았다. 대부분 2023년도 사업 성과와 유사하였기에 여기에서는 영역별로 2024년 사업 계획이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정책연구 및 개발에서는 대전, 울산과 충북의 종단연구가 새롭게 추가된 점이 특징적이다. 대전은 대전교육정보원에 종단연구 온라인 시스템 서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조사·관리한다. 또한 울산에서는 2024년 울산 교직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2년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대상을 전 교직원(교육전문직원 포함)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연구 체제의 변화가 나타난 연구소들도 있다. 경기의 경우 경기교육 정책 중심의 연구 수행을 위하여 기존의 기본 연구를 없애고 정책연구를 확대하였다. 경북에서는 2023년 자체연구로 편성된 “학생 사회정서역량 수준 실태 분석 연구”가 2024년 삭제되었다. 인천은 현안연구(연구기간: 3개월)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전북은 기존의 연구보고서 및 프로젝트팀 연구보고서가 2024년 계획 상에서 없어졌다.

다음으로 현안 분석 및 제언에서 특징적인 점은 경기의 경우 2024 유네스코 국제포럼, 정책지원 학습세미나, 웨비나 이음토크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중 정책지원 학습세미나는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이 공동 주관하는 학습세미나로,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차기년도 정책 방향 및 연구주제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웨비나 이음토크는 일부 정책연구과제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정책담당자, 교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웨비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책담당자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대전은 대전교육정책 학생모니터단의 리더십 및 정책제안서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캠프가 추가되었고, 충북은 충북교육정책연구박람회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표 III-6〉 교육정책연구소 2024년 사업 계획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강원	정책연구 수행	정책연구 22과제 수행	연찬회 운영			
	위탁연구	전문기관 협력연구 12과제 수행	착수, 중간, 결과발표회	연구 과제별 착수, 중간, 결과 발표회 운영		
경기	정책연구	• 경기교육 정책 중심의 연구 수행 - 24.3.15.부터 정책연구 20건 착수	연구결과발표회 및 연구보고서	연구결과 공유를 위해 연구결과 발표회 및 연차보고서 발간	전국교육 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실무자 및 연구자 협의회 주최 공동연구 및 워크숍 참여
	현안보고	• 교육청 수시 조사 요구를 통해 현안보고 형태로 운영	2024 유네스코 국제포럼	•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및 국제교육포럼 개최 지원		
수탁연구	• 경기교육 정책 중심의 수탁연구 수주를 통한 연구 수행 - 총 5건 수행 중	미래교육 트렌드 세미나	• 미래교육 트렌드 세미나 운영 - 개최 주기: 격월(6월, 7월, 9월, 11월) 총 4회 예정	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 추진	
		경기교육 정책포럼	•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는 경기교육 정책포럼 운영			
		정책지원 학습세미나	• 최신의 정책 동향, 사회 및 기술 변화 등에 대한 일상 학습 세미나 운영			
		웨비나 이옴토크	• 정책담당자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웨비나 '이옴 토크' 운영			
		경기교육 e음 발간	• 현장과의 소통 및 연구결과의 확산, 현장 기반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웹진 발간			
		교육데이터 인사이트	• 정책 성과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 결과 확산 및 홍보			
		학술대회 개최	경기교육정책 성과에 대한 데이 터를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			
경남	기본연구 과제 선정 및 발간	• 연차보고회 실시 및 연구보고서 발표(12개 예정) • 연구보고서 발간 및 사이버도서관 탑재	경남교육정책 홍보 및 현안 분석	• 이슈페이퍼 '경남교육정책 지금' 발간 • 오피니언 페이퍼 '이슈+생각' 발간 • '통계로 보는 종단연구' 발행	컨설팅	• 교원특별연수 교사 및 현장연구회 책임연구원 및 연구협력관 지정 • 연구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컨설팅 실시 • 요청학교 및 기관 컨설팅
	경남교육 종단연구	• 설문 문항개발 및 4차년도 종단연구 실행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표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경북	현장 연구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선발(19팀) • 연구과제 수행 및 컨설팅 •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발표(19개 예정) 	교육정책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교육정책포럼 운영 - 정책연구 수행형, 교육현안토론타운, 초청강연형 등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대표 및 실무자 협의회 참가 및 소통 체계 확립 •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워크숍 참가
	교원특별 연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형, 현장지원형 교원 특별연수 교사 대상 연수 운영 •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발표(26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 국내외 교육기관 방문 • 학회 가입 및 참석, 학회 논문 게재 등
	위탁연구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해외 우수유학생 유입과 정착 방안 연구 외 	경북국제교육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미래 세대 성공적 삶의 기본 자질(사회정서역량) • 기간: 2024. 10. 19.(토) 10:00~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현장연구 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기반 교과별 질문탐구 수업 방안 연구 외 8건 • 현장연구 나눔회 개최 예정 	국내교육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전국 교육청 및 연구소 등을 통해 발표되는 교육동향 정리 및 분석 • K-에듀파인 공문 게시 및 교육전문직원과 희망자에 메일링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협의회, 공동워크숍 개최 및 참여 • 인성인문학 통합시스템 운영 • 인성인문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위 학교 지원 • 인성인문학 교육 자료집 개발 및 보급 • 학교자율시간 활용 [사회정서역량] 교과서 개발 • 경북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종단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국외교육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8개국 • 월 1회 교육 주제를 선정 	
	자체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사회정서역량 수준 실태 분석 연구 	교육이슈 미니 세미나 /교육이슈 페이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교육 이슈 발표자를 선정→정보 수집, 분석 연구 활동→미니세미나 개최)→ 교육 이슈 발표 및 토론 활동→원내 교육 이슈 페이퍼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관(인텔코리아, 구글코리아) 현장 방문 워크숍(9월 예정) • 디지털 기반 정책 토론회 1, 2차 개최 예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광주	대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대안교육 실태 분석과 학생 및 학부모 대안교육 유형별 수요 현황 파악 등 	공감톡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교육정책 성과 홍보 및 공유, 효과적인 교육정책 담론 및 실천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교육정책연구 관련 수시 자문·컨설팅 실시 • 정책연구과제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참여
	AI 미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디지털 활용 교육 분야 및 AI-SW교육 분야 강화 연구 	<상반기 공동 워크숍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별 회의(대표, 실무자, 연구사, 연구원, 행정) 진행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늘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학교 관련 선행연구 및 광주지역 여건, 교육구성원 요구 분석 등 		<table border="1"> <tr> <td><하반기 공동 워크숍 -공동연구발표></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강연, 공동 연구 발표 • 역할별 회의 진행 </td></tr> <tr> <td>광주 교육정책 연구 포럼</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 도출 </td></tr> <tr> <td>광주 교육 국제포럼</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기반 세계로, 디지털기반 미래로 등 주제 선정(추후) </td></tr> </table>	<하반기 공동 워크숍 -공동연구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강연, 공동 연구 발표 • 역할별 회의 진행 	광주 교육정책 연구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 도출 	광주 교육 국제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기반 세계로, 디지털기반 미래로 등 주제 선정(추후) 			
<하반기 공동 워크숍 -공동연구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강연, 공동 연구 발표 • 역할별 회의 진행 											
광주 교육정책 연구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 도출 											
광주 교육 국제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기반 세계로, 디지털기반 미래로 등 주제 선정(추후) 											
대구	기본연구	기본연구과제 10건 수행	이슈페이퍼 발간	대구미래교육 창(窓) 발간	전국교육 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분기별 협의회, 공동워크숍 참여, 공동연구 수행						
	위탁연구	위탁연구 5건 추진	대구미래교육 콘퍼런스	대구미래교육콘퍼런스 개최(12월중)								
	현장연구	현장연구 8팀 참여	대구교육종단연구	대구교육종단연구 8차년도 연구 수행								
	데이터 연구소 운영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 교육, 데이터 아카이브 운영	<table border="1"> <tr> <td>대구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td><td>제5회 대구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td></tr> <tr> <td>대구교육 이슈톡톡 운영</td><td>교육정책 이슈 및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교육공동체간 소통의 장 마련</td></tr> </table>	대구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제5회 대구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	대구교육 이슈톡톡 운영	교육정책 이슈 및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교육공동체간 소통의 장 마련			
대구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제5회 대구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											
대구교육 이슈톡톡 운영	교육정책 이슈 및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교육공동체간 소통의 장 마련											
대전	기본연구(자체연구)	자체연구(종단연구 포함) 6건	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4건 발간	대전교육 정책연구 지원단 운영	정책연구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종단연구위원회, 자문단 운영(104명)						
	위탁연구	위탁연구 6건	교육동향	교육동향 12건 발간								
	현장연구	학습연구년특별연수 교사 현장연구 2건(2팀)	대전교육 성과 통계분석 자료	「한눈에 보는 대전교육」 발간								
		대전교육정책 연구팀 현장연구 4팀(4팀)	대전교육정책 학술 콜로키움	지역대학 연계 학술 콜로키움 운영(2회)	대전교육 정책 네트워크	대전교육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대전교육 종단연구	제1차 대전교육종단연구 수행(반복적 횡단조사) 대전교육종단연구 저널(영문판 포함, 2회) 온라인 시스템 운영(자체 서버), 학생의 마이 페이지 기능 고도화 예정 제1회 대전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차보고회	교육가족 대상 연차보고회 개최	교육발전 특구지원 연구단	대전세종연구원·대전 테크노파크 연계 정책연구 수행, 포럼 개최, 컨설팅, 자문 및 검토 업무 총괄						
			대전교육정책 워크숍	4급(상당)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부산	• 위탁연구 1건	전문적학습 공동체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상시학습 60시간 인정)	전국교육 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전국 공동연구 2건 수행, 전국 공동워크숍 참여
		대전교육정책 학생모니터단	초·중·고 학생모니터단 운영(발대식, 역량강화 연수, 역량강화 캠프) (101명)		
		학생 정책토론회	대전미래교육박람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발굴한 정책의 입안 가능성 및 타당성을 논의		
		소식지 발간	대전교육정책연구 'DEPI 소식' 연 2회 발간		
서울	2024 서울교육정책 연구소 연차보고서 발간	이슈페이퍼	• 이슈페이퍼 12건	부서 협력	• 이슈페이퍼 결과 공유를 위한 이슈토론회 운영(12회)
		보고서	• 부산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발간(1회)		
		웹진	• 부산교육 정책매거진 발간 및 웹진 공유(4회)		
		교육연구지원	• 교육정책자문단 및 현장 모니터단 운영(각5회)		
		세미나	• 상·하반기 교육정책세미나 등 운영(3회)		
		아카데미	• 부산교육전문직아카데미 개최(7월)		
		포럼	• 부산교육정책포럼 운영(11월)		
경기	2024 경기교육정책 연구소 연차보고서 발간	자체역량 강화	• 역량강화 워크숍	전국교육 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분기별 협의회, 공동워크숍 참여
		이슈페이퍼 발간	이슈페이퍼 7건 수행		
		현안분석	현안분석 1건 수행		
		글로벌 교육동향 및 글로벌 리포트 발간	글로벌교육동향 4건, 글로벌리포트 4건 발간		
		서울교육종단 연구	서울학생종단연구, 서울교원 종단연구 4차년도 연구 수행		
인천	2024 인천교육정책 연구소 연차보고서 발간	서울교육종단 연구 학술대회	제7회 서울교육종단연구 학술 대회 개최	서울교육 연구년 워크숍 운영	서울교육연구년 교사 연구 역량 강화 워크숍(연 4회), 연구보고서 컨설팅(연 4회), 연구과제 수행(24건)
		서울교육 정책포럼	서울교육정책포럼 개최 예정		
		서울국제 교육포럼	서울국제교육포럼 개최(8월)		
		정책연구 발표회	2024 정책연구 발표회 개최 (예정)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세종	정책연구	정책연구 2과제 수행	이슈페이퍼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쟁점 등 연 2회	정책 연구회 운영	세미나형 5과제 운영
	현안연구	현안연구 3과제 수행 교원특별연수(학습 연구년) 3과제 수행			실천연구 회 운영	교수·학습(36팀), 교육과정(22팀), 범교과(20팀), 생활교육(10팀), 기타(2팀)(총 90팀 1,116명)
	위탁연구	위탁연구 7과제 관리	세종교육 정책세미나	협력과 상생의 교원-학부모 관계 설정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등 7개 주제로 연 7회 진행	능동적 정책 공유	세미나실(2실) 운영·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각종 보고회, 협의회, 포럼 등 교육정책 숙의를 통한 능동적 정책 공유의 장 마련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	연구과제 수요 조사 및 현장 공모 2회	이슈페이퍼 발간	이슈페이퍼 7회 발행	전국교육 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분기별 협의회, 공동워 크숍 참여, 책임연구 1건, 공동연구 1건 수 행
울산	자체연구	전략과제 1건, 현안 과제 5건 수행				
	현장연구	현장연구팀 공모 및 운영(정책연구형 2팀, 수업실행연구형 2팀 총 4팀 연구)	동향분석지 발간	동향분석지 6회 발행		
	위탁연구	2024 울산 교육정 책 여론조사 1건	정책 세미나 운영	주제강연 및 정책토크 세미나 연 4회 수행		
	울산교육 종단연구	『울산 교육종단연구 2024』정책 용역 연 구 착수(4건)	울산교육포럼	울산교육포럼 연 1회 수행		
	교직원 실태조사	2024 울산 교직원 실태조사 실시(전 교 직원으로 대상 확대)	연차보고회	제 6회 연차보고회 개최		
인천	기본연구	기본연구과제 2건 수행 (연구기간: 1년)	교육정책토론회	교육정책토론회 2회 개최	전국교육 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협의회·공동연구과제 참여, 공동워크숍 운영
	수시연구	수시연구과제 4건 수행 (연구기간: 6개월)				
	현안연구	현안연구과제 4건 수행 (연구기간: 3개월)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전 남	현장연구	현장연구과제 3팀 공모·운영	인천교육정책연구 컨퍼런스 1회 개최	인천시정 연구 네트워크	협의회, 연구자문 참여, 시의회 정책소통토론회 개최	
	협력연구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연구과제 1건 수행				
	위탁연구	위탁연구과제 2건 수행				
	종단연구	종단연구과제 1건 수행	인천교육 연구브리프	인천교육 연구브리프 4회 발간		
전 북	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	12개 연구과제 수행, 연차보고회, 찾아가는 교육정책 연구과제 발표회 운영 예정	전남교육 여론조사	전남교육정책 만족도, 전남 교육정책 방향 및 주요 정책 이해도 조사(도민, 학부모 각 1000명, 전화면접 및 ARS조사)	핵심역량 강화HRD 연수 운영	월1회 연구소 구성원의 연구역량 강화 연수 활동 운영
	전남미래 교육(정책 연구과정) 특별연수 운영	교사 9명 참여, 주2회 집합연수, 팀별 연구과제 수행 및 발표	전남교육 희망포럼	주제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교육의 공공성' 포럼 개최	전국교육 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운영	실무자협의회 및 공동워크숍 2회 참여, 네트워크 공동연구과제 수행
	전남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 마당 운영	경북교육청 공동운영, 글로컬미래교육박람 회(5.30.) 중학교 5팀, 고등학교 40팀 참가, 중 2팀, 고 13팀 발표	전남교육종단 연구 (7차) 및 학술대회 개최	패널1(고1), 패널2(고3) 학생(인지, 정의, 사회적 변화 조사), 교원, 학부모 등 총 9,000명 대상 종단 조사 실시 및 제2회 전남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9월) 예정	전남교육 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	연구 협력을 위한 전남 지역 및 대학 교육연구기관 공동포럼 및 학술 대회 운영
	전남교육 이슈&정 책 발간	교육시론, 정책연구, 이슈진단, 특별기획 등 교육현안 과제, 연 4회 발간 (3, 6, 9, 12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국외 사례조사	• 일본 국외 사례 조사 실시(작은학교, 도서관 등) • 유럽 국외 사례 조사 실시(이민자 교육 등)		
전 북	교육정책 분석	전북교육정책연구지 '오늘' 발간 (월1회, 총12회)	교육통계 분석	교육통계 자료 분석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 발간'(월1회, 총12회)	전국교육 정책연구 소 네트워크	• 전국교육전북교육정 책연구소네트워크 공동연구 수행 1건 • 전국교육전북교육정 책연구소네트워크 실무자 협의회 참석 4회 •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연구 발표 및 워크숍 참여 2회
	콜로키움 운영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운영 (월1회, 총12회)	해외 교육동향 분석	해외교육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외 사례 비교 (월1회, 총12회)	'콜로키움 현장지원단'	매월 1회 연구보고서 검토 지원

구분	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제주	기본연구	개인 연구과제 6건	이슈페이퍼 발간	2024년 교육의 내일 6회 간 예정	전국교육 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분기별 협의회, 공동워 크숍 참여
	공동연구	공동 연구과제 1건	월간 제주교육	매월 특집 기사 투고 12회		
			카드뉴스 발간	2024년 매월 12회 발간 예정		
			교육 포럼	교육 포럼 개최(주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상상 넘어 미래 교육을 探(탐)하다!)	이화여대 미래교육 연구소 교류	공동연구 추진 및 협의 회 운영
충남	네트워크 연구	네트워크 과제 1건	공동연구 연구공개보고회	2024년 상반기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2024년 하반기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기본연구	기본연구과제 7건 수행	이슈페이퍼 발간(매월 필요시)	찾아가는 교육정책연구 발간	전국교육 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분기별 협의회, 공동워크숍 참여, 공동연구 수행
	위탁연구	위탁연구 1건	충남교육정책마 당(4회)	충남교육정책마당		
충북	현장연구	현장연구 4팀 참여	충남교육정책토 론회(1회)	관학협력사업(공주대, 공주교대)-본청 정책기획과 협력		
	정책연구 용역 추진	정책연구용역 추진 25과제	이슈페이퍼 발간	1건	전국교육 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참여	분기별 협의회, 상·하반기 공동워크숍 참여, 공동연구 수행
	현안과제 연구	현안과제 분석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연구 3과제 수행	교육정책 세미나 운영	2회		
	충북교육 종단연구	충북교육종단연구 기반구축 연구 수행	교육포럼 개최	2회		
	충북교육 정책 연구회 운영	현안 중심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교학상장연구회 3팀 운영	교육정책아카데미 운영	2회		
충북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 발표 한마당 운영	교육연구회 공모 운영	150팀 팀별 2,500천원	충북교육정책박 람회 개최	1회(12월)	충북교육 정책자문 단 운영	충북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내외부 전문가 10명)
	1회(6~10월)	이슈와 동향 발행	국내·외 교육정책 공유를 위한 간행물 이슈와 동향 발행(월 2회)			

사. 향후 발전 방안(전략)

연구소별 향후 발전 방안(전략)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 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전문성의 기준으로는 학위가 대표적이었고, 경북, 광주의 경우 교육연구사의 연구 능력을 중요시함에 따라 교육연구사 선발 시에도 학위를 보유하거나 연구 경험이 충분한 자를 선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교육전문직 선발 시 정책연구 전담 분야(박사)로 선발하여 장기(3~5년) 근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발전 방안을 연구소별로 살펴보면, 강원은 교육현장 및 정책적 요구에 적합한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강원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며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강원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경남은 기본 연구과제 심의위원 인력풀을 확보하고, 이를 경남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심의위원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현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객원 공동연구자로 위촉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경남교육종단연구 학술 대회 개최를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고, 연구 과제와 정책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은 크게 전문 연구 인력 확보, 교육연구사 선발 시 연구 역량 포함, 수시 정책 토의 및 의견수렴 활동을 통해 우수 정책 개발, 연구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강화, 자체 연구 활동 진행, 타 정책연구 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평가 및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구분하여 각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 확보, 정책연구과제 담당 연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박사급 교육연구사를 팀장으로 배치하고 추후 교육연구사 및 전임연구원 충원 예정, 예산의 적절한 집행 등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대구는 교육 공동체간 실천적·발전적 정책 공유 기회 확대를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연구보고회 내실화, 정책 이슈 공유회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은 구성원별 발전 방안과 사업별 발전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구성원별 발전 방안으로는 정책연구 전담 분야로 박사학위를 갖춘 교육연구사 선발 및 장기 근무, 연구원의 경우 종단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연구과제 수행 건수 증대, 연구 전담인력으로서 과전교사 활용, 각종 연구방법론 연수로 학습연구년 교사의 연구 역량 강화, 주무관의 경우 연구인력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

도록 각종 행정 업무 지원 및 연구소 홍보 역할 강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사업별 발전 방안으로는 종단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전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체연구의 비중을 높이는 것, 위탁연구의 예산을 증액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과제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여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것, 대전교육정책워크숍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한눈에 보는 대전교육」)를 대전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부산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부산미래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성 있는 연구와 성과 공유를 통해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서울은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서울교육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연구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고, 공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울산은 울산 교육정책 연구·개발의 통합적 접근 강화, 전문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 체제 구축, 정책연구개발 운영체제 강화로 효율성 증대,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촉진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은 전문 연구위원을 중원하고 연구위원의 직급 체계를 구성하며, 연구위원들의 국내외 학회 발표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증거 기반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해외교육동향 파악을 위한 통신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전남은 현장 중심 교육정책 개발, 교육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연구역량 및 협력 강화로, 전북은 연구자별 2개월 단위 연구를 통한 교육정책 관련 정책 제언의 신속성 강화 및 시의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제주는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현안 중심의 연구 체제를 구축하며, 학교현장과의 적합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한 체계도 강조하고 있다. 충남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연구를 확대하여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교육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론장을 확장하려 한다. 또한 교사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탐구 및 실천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충북은 “교육정책의 개발과 교육 현안 연구,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충북미래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연구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III-7〉 교육정책연구소 향후 발전 방안(전략)

구분	내용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현장 및 정책적 요구에 적합한 정책연구 과제의 발굴 및 개발 • 전문기관 협력연구를 통한 강원교육의 실태 분석 및 정책 방안 제시 • 강원교육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 결과 공유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연구과제 심의위원 인력풀 확보 및 심의위원 제도 개편(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내 각 대학과 연계한 기본 연구과제 심의위원 인력풀 확보 • 기본 연구과제 객원 공동연구자 운영을 통한 연구의 질 제고(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동연구자로 위촉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도교육청 각 사업부서와 연계한 연구과제 공모 설명회 실시(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별 별도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과제를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와 경남교육 정책수립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2024년 9월~) • 제1회 경남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경남교육종단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경남교육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연구 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정책 연구원, 데이터 분석가, 정책 분석가 등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 연구원, 연구위원, 학습연구년제 교사 활용 등의 인력 투입 확대 필요 • 교육연구사 선발 시 연구 역량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책 담당 연구사 별도 선발을 통해 교육 연구 경험, 석·박사 학위 등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연구 인력 배치 및 자체 연구 활동 진행 바탕 마련 • 수시 정책 토의 및 의견수렴 활동을 통해 우수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물을 보급하고 관련 정책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함. 정책 보고서, 정책 포럼, 정책 브리핑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 공유 및 확산 활동 필요 • 연구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위탁연구 활동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함. 이를 위해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기존 연구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자체 연구 활동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교육정책 연구 과제의 대부분이 본청 업무 담당자의 요구에서 비롯됨. 자체 교육 연구 활동 진행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검증할 수 있는 주체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 필요 • 타 정책연구 기관 및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연구소,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관점과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 요구 • 평가 및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대한 후속 연구 활동 진행 필요, 효과적인 성과 측정 지표 개발하여 교육 정책 연구 활동의 방향성 설정 필요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현장의 석사과정 이상급 특별연수 교사 발굴 및 학교현장의 현직연구원들을 확보하여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응할 예정 • 기존의 행정업무 중심의 연구사 인력을 정책연구과제 담당 연구사의 전문성을 위해 박사급 연구사를 팀장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협력하고 연구 및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상반기 내 충원할 예정이며, 추후 연구사 및 전임연구원을 충원하고, 연구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광주교육정책연구센터가 정책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업무추진과 관련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질 좋은 연구 수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책 연구 과정 및 성과 공유 활성화: 대구미래역량교육에 기반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기적인 이슈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 공동체간 실천적·발전적 정책 공유 기회 확대 필요. 이를 위해 연구 보고회 내실화, 정책 이슈 정기 공유회('대구교육 이슈톡톡' 운영 추진)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사) 정책연구소 성격상 교육전문직 선발 시 정책연구 전담 분야(박사)로 선발하여 장기적으로 (3~5년) 근무할 필요 있음

구분	내용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종단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연구과제 수행 건수를 증대할 필요 있음 - (파견교사) 파견 시 반드시 학생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한하지 말고, 파견교사가 연구 전담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습연구년특별연수교사) 유레카 심화연수(통계)와 양적·질적 연구방법론 연수로 연구 역량 신장 - (주무관) 연구위원의 연구 전념을 위한 각종 행정 업무 지원 및 정책연구소 흥보 역할 강화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연구) 종단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과제를 발굴하여 대전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비중을 높여야 함 - (위탁연구) 위탁연구 총예산을 증액하여, 수요를 감당하고, 과제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여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역량 강화) 대전교육정책 워크숍,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의 의미 있는 사업을 지속·발전시켜야 함 - (성과분석)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 사업의 성과를 통계자료로 제시한 「한눈에 보는 대전교육」 자료를 대전교육종단연구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각화할 필요 있음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있는 연구 및 성과 공유로 교육 정책의 효과성 확대 • 분야별 전문가 협력 연구로 부산미래교육 정책 방향 설정 • 시의성 있는 정책 연구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인식 확산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체제 구축을 통한 서울교육정책의 추진 동력 확보 • 교육현안 토론 활성화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연구 선순환 체제를 통한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교육정책 연구·개발의 통합적 접근 강화 • 전문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 체제 구축 • 정책연구개발 운영체제 강화로 효율성 증대 •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촉진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연구위원 증원 • 연구위원 직급 체계 구성, 연구위원 국내외 학회 발표 지원 •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추진·평가 기반 구축 • 해외교육동향 파악을 위한 통신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인천교육종단연구 운영(2025년 운영 예정)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 교육정책 개발: 전남교육 주체들의 필요에 맞춰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남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 • 교육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국내외 및 전남의 주요 교육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교육정책 공론의 장 조성 • 연구역량 및 협력 강화: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연구그룹에 참여하여 연구역량을 공유하고 강화 함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별 2개월 단위 연구를 통한 교육정책 관련 정책 제언의 신속성 강화 및 시의성 확보 •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의 현장지원단 활동 강화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종단 및 현안 등) 체제 구축 • 제주 교육정책을 선도하고, 학교현장과의 적합성을 높이는 연구 추구 • 연구 성과 활성화 추진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 활성화(자율연구 확장) • 교육 대전환에 대응하는 공론장 확장(세미나, 정책마당) • 공동 탐구-사유-실천하는 교사 성장 도모(교원 책 출판 사업)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앞서가는 충북교육 정책 수립의 방향과 비전 제시: 교육정책 조사·분석 및 현안과제 연구,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개발·적용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교원 특별연수(학습연구년) 및 대학원 파견교사 정책연구개발 수행 강화 • 정책과 현장을 잇는 연구성과 공유: 교육연구 컨퍼런스 운영, 충북교육정책연구박람회 개최, 충북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발표 한마당 운영 •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현장연구활동 지원: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아. 운영의 법적 근거 및 규정

재단법인으로 설치된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육정책연구소는 해당 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중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감 공약으로 안정적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조직, 인력, 공간 등 ‘교육정책연구소 재구조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전남, 전북, 충남교육정책연구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별도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있다.

〈표 III-8〉 교육정책연구소 운영의 법적 근거 및 규정

구분	법적 근거	운영 규정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
경기	• 민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시행 2013. 5. 2.] [경기도조례 제4553호, 2013. 5. 2., 제정]	-
경남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10조(경상남도교육규칙 제946호, 2024. 5. 9., 일부개정)	-
경북	• 제1절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제7조(설치) ① 교육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현장연구지도, 교육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정보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에 둔다. • 제8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광주	• 민선4기 교육감 공약 66개중 45번째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재구조화 - 안정적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조직, 인력, 공간 등 재구조화 필요	교육정책연구부-331(2024.03. 15.) 2024년 광주교육정책연구센터 운영 계획
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제5절 제26~30조 (대구광역시조례 제6086호, 2023. 12. 29.,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장 제4절 제17~18조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 2019. 4. 1.(교육정책연구부 규칙 제2019-1호)
대전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10~11조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68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장 제1절 제8~10조 (대전광역시조례 제5485호, 2020. 7. 3., 일부개정)	제정 2019. 6. 10. 개정 2023. 4. 13. 시행 2023. 4. 13.
부산	• 설치: [시행 2015.3.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24호] / [시행 2015.9.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34호] • 조직 개편: [시행 2019.1.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95호] / [시행 2023.3.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83호]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규정 2016. 6. 1.부터 제정 및 시행 총 5차 개정 현재. 2023. 3. 10.부터 시행

구분	법적 근거	운영 규정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제1절 제10~1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9188호, 2024. 5. 2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12~19조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4호, 2024. 6. 20., 일부개정) 	시행 2024. 3. 18.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86호, 2024. 5. 10. 일부개정) 제4조의2(미래기획관) 미래기획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4.5.10.] - [별표] <개정 2024.5.10.> 사무분장표(제20조제3항 관련) - 다. 미래기획관 - 22. 교육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 23. 연구기관·단체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24. 현장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5. 교육정책세미나·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 26. 교육정책 관련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시행 2023. 6. 28.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제12조 [시행 2024.1.1.] [울산광역시조례 제2827호, 2023.12.28. 일부개정]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5.2.]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485호 2024.5.2.일부 개정)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 제8조 (하부조직) - ⑦항 	-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제3조 (인천광역시조례 제6983호, 2023. 2. 20.,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장 제3조, 제5장 제41조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57호, 2024. 6. 24., 일부개정) 	-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제1절 제11조 (전라남도도조례 5882호, 2023. 12. 21.)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12조 7항 (전라남도규칙 제833호, 2023. 02. 22.) 	제정 2012. 3. 22. 규정 제28호 제1차 개정 2013. 7. 23. 규정 제37호 제2차 개정 2014. 1. 15. 규정 제38호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본법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904호, 2024.1.1.) 	개정 2024. 1. 5., 시행 2024.1.1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7조 (전부개정 2024. 8.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49호)	-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본법 제 24조(학술문화의 진흥)(전문개정 2007. 12. 31.)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3. 12. 29. 일부 개정)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관리 규정(개정 2021. 1. 29.)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 2024. 5. 17.] [충청북도조례 제5119호, 2024. 5. 17., 탄법개정]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4. 5. 17.]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83호, 2024. 4. 19., 탄법개정] 	-

3. 소결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 조직 및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하여 연구소별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연구진에서 구안한 조사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소 공식 명칭, 기본 방향(미션, 비전, 목적, 전략), 조직 현황(교육청 내 편제, 연구소 인원 구성), 최근 3년 예산, 2023년 사업 성과(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2023년 연구자별 연간 연구물 수, 2024년 사업 계획(정책연구 및 개발, 현안 분석 및 제언, 연구 협력 및 연대), 향후 발전 방안(전략), 운영의 법적 근거,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교육정책연구소의 기본 방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션 및 비전에서 설정 체계는 다소 다르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임을 확인하였다. 즉 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목적에 있어서는 현장지향적 교육정책 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략으로는 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evidence-based), 교육공동체 및 정책연구 수행과 관련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협력적인 연구 수행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연구소별 운영 예산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대비 2024년 운영 예산은 4개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증액되었으며, 2023년 대비 2024년 운영 예산은 9개 시·도에서 증액되었는데, 교육종단연구 시작으로 인한 예산 배정 등 일부 비목 예산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23년 대비 2024년 운영 예산이 감액된 곳은 7개 시·도로, 교육종단연구 종료로 인한 관련 예산 미배정, 연구사업비(연구비) 감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사업비(연구비) 감액이 교육정책연구의 축소 또는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정책연구소의 인원 구성과 담당 업무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소들의 정원은 대략 10명 내외였으며, 대다수 연구소는 연구(위)원과 교육연구사가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연구사는 연구 수행보다 행정 업무 수행 비율

이 높았으며,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인 연구(위)원이 없는 지역은 주로 교육 연구사, 파견교사, 학습연구년 교사가 연구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 연구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2023년 기준 연구자별 연간 연구물 수를 확인한 결과,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여부, 연구 과제의 규모, 현안 과제 수행 여부 등에 따라서 생산되는 연구물의 수량과 분량의 분포가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교육정책연구소별 2023년 사업 성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연구 및 개발 측면에서는 대부분 연구소에서 자체 기본연구, 위탁연구,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는 현장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현안 분석 및 제언 측면에서는 주로 국내외 동향 분석, 이슈페이퍼 또는 브리프 발간, 연구 및 정책 홍보를 위한 웹진, 카드뉴스 등을 발간하고 있었다. 또한 포럼, 학술대회, 토론회,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구 협력 및 연대 영역에서는 모든 연구소가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었고, 연구 관련 현장 자문단 및 지원단 등을 운영하였다. 국내 대학과의 교류나 학회 학술대회 참석 등 학술교류도 실시하고 있었다.

여섯째, 교육정책연구소별 2024년 사업 계획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사업 성과와 비교했을 때, 정책연구 및 개발 측면에서는 연차보고회와 연구 결과발표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이를 공유하는 활동이 강화되었고, 데이터 기반 연구와 인사이트 발간이 증가하여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연구 및 개발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안 분석 및 제언 측면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이슈페이퍼와 교육동향 보고서 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슈페이퍼는 연구 결과를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교육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과 제언 강화와 더불어 정책담당자 및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연구소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협력 및 연대 측면에서는 유네스코 국제 포럼, 경북국제교육포럼, 서울국제교육포럼 등 국제 협력 활동 강화 노력과 학생 모니터단, 학생 정책토론회, 교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등 교육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인식 조사 개요

2. 설문 결과 분석

3. 소결



인식 조사

1. 인식 조사 개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정책연구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를 위하여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부에서 17개 시·도 교육정책연구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설문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설문 문항은 개인정보 수집 관련 2문항, 일반 특성 관련 2문항, 교육정책연구소 비전(목적) 달성을 운영 전략 1문항, 연구 전문성 강화 발전 방안 1문항, 인적 구성 및 담당 업무 개선 방안 1문항,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발전 방안 1문항, 대외적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 1문항,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활동 발전 방안 1문항, 자유 기입 형태의 교육정책연구소 발전 방안 1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24년 8월 21일(수)에서 30일(금)까지 총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 방법은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분석은 SPSS 27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응답은 85명이 응답하였다. 첫째 직책별로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은 10명(11.8%), 교육연구사(장학사) 24명(28.2%), 연구(위)원 26명(30.6%), 주무관 13명(15.3%), 과견(연구)교사 12명(14.1%)이 응답하였다. 둘째, 교육정책연구소가 소속한 기관²⁾에 따라 살펴보면, 본청 21명(24.7%), 직속기관 64명(75.3%)이 응답하였다.

2) 기타로 2명이 응답하였으며, 서술로 작성된 기관을 확인 한 결과 본청 소속이여서 분석에서는 본청으로 분석하였음

2. 설문 결과 분석

가. 교육정책연구소의 비전(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 전략

교육정책연구소의 비전(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 전략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로 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순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기반 교육정책 연구 방향 강화(3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정책연구소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24.1%), 연구 결과의 정책 환류 노력(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는 교육정책연구소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42.4%)과 현장 기반 교육정책 연구 방향 강화(37.6%)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연구 결과의 정책 환류 노력(28.2%)과 현장 기반 교육정책 연구 방향 강화(2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책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50.0%), 연구(위)원(53.8%), 파견(연구)교사(41.7%)는 교육정책연구소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연구사(장학사)(54.2%)와 주무관(53.8%)은 현장 기반 교육정책 연구 방향 강화로 응답하였다. 2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60.0%)은 현장 기반 교육정책 연구 방향 강화, 교육 연구사(장학사)(41.7%)와 연구(위)원(30.8%)은 연구 결과의 정책 환류 노력, 주무관(38.5%)은 교육청 부서 수요 중심의 연구 주제 선정, 파견(연구)교사(41.7%)는 차별화된 연구의 전문적 수행을 응답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속한 조직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를 살펴보면 본청(52.4%)은 교육정책연구소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직속기관은 교육정책연구소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과 현장 기반 교육정책 연구 방향 강화를 각각 39.1%로 응답하였다. 2순위를 살펴보면 본청(38.1%)은 현장 기반 교육정책 연구 방향 강화를, 직속기관(26.6%)은 연구 결과의 정책 환류 노력을 응답하였다.

〈표 IV-1〉 교육정책연구소의 비전(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 전략

단위: 명, % (N=85)													
구분	질문										빈도	비율	
전체	전체 (1순위+2순위)	1. 교육정책연구소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현장 기반 교육정책 연구 방향 강화 3. 교육청 부서 수요 중심의 연구 주제 선정 4. 차별화된 연구의 전문적 수행 5. 연구 수행에 교육주체 참여 장려 6. 연구 결과의 정책 환류 노력										41 (24.1) 55 (32.4) 14 (8.2) 21 (12.4) 6 (3.5) 33 (19.4)	
		전체										170 (100)	
		1. 교육정책연구소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현장 기반 교육정책 연구 방향 강화 3. 교육청 부서 수요 중심의 연구 주제 선정 4. 차별화된 연구의 전문적 수행 5. 연구 수행에 교육주체 참여 장려 6. 연구 결과의 정책 환류 노력										36 (42.4) 32 (37.6) 1 (1.2) 6 (7.1) 1 (1.2) 9 (10.6)	
		전체										85 (100)	
		1. 교육정책연구소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현장 기반 교육정책 연구 방향 강화 3. 교육청 부서 수요 중심의 연구 주제 선정 4. 차별화된 연구의 전문적 수행 5. 연구 수행에 교육주체 참여 장려 6. 연구 결과의 정책 환류 노력										5 (5.9) 23 (27.1) 13 (15.3) 15 (17.6) 5 (5.9) 24 (28.2)	
		전체										85 (100)	
		2. 현장 기반 교육정책 연구 방향 강화 3. 교육청 부서 수요 중심의 연구 주제 선정 4. 차별화된 연구의 전문적 수행 5. 연구 수행에 교육주체 참여 장려 6. 연구 결과의 정책 환류 노력										23 (27.1) 13 (15.3) 15 (17.6) 5 (5.9) 24 (28.2)	
구분	순위	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N	%		
			N	%	N	%	N	%	N	%	N	%	
직책	1순위	교육연구관(장학사)	5	(50.0)	3	(30.0)	0	(0.0)	0	(0.0)	1	(10.0)	10 (100)
		교육연구사(장학사)	7	(29.2)	13	(54.2)	0	(0.0)	1	(4.2)	0	(0.0)	24 (100)
		연구(위)원	14	(53.8)	5	(19.2)	0	(0.0)	4	(15.4)	0	(0.0)	26 (100)
		주무관	5	(38.5)	7	(53.8)	0	(0.0)	1	(7.7)	0	(0.0)	13 (100)
		파견(연구)교사	5	(41.7)	4	(33.3)	1	(8.3)	0	(0.0)	0	(0.0)	12 (100)
		전체	36	(42.4)	32	(37.6)	1	(1.2)	6	(7.1)	1	(1.2)	85 (100)
	2순위	교육연구관(장학사)	1	(10.0)	6	(60.0)	1	(10.0)	0	(0.0)	0	(0.0)	10 (100)
		교육연구사(장학사)	1	(4.2)	6	(25)	1	(4.2)	5	(20.8)	1	(4.2)	24 (100)
		연구(위)원	0	(0.0)	7	(26.9)	4	(15.4)	4	(15.4)	3	(11.5)	26 (100)
		주무관	1	(7.7)	1	(7.7)	5	(38.5)	1	(7.7)	1	(7.7)	13 (100)
		파견(연구)교사	2	(16.7)	3	(25.0)	2	(16.7)	5	(41.7)	0	(0.0)	12 (100)
		전체	5	(5.9)	23	(27.1)	13	(15.3)	15	(17.6)	5	(5.9)	85 (100)
기관 소속	1순위	본청	11	(52.4)	7	(33.3)	1	(4.8)	2	(9.5)	0	(0.0)	21 (100)
		직속기관	25	(39.1)	25	(39.1)	0	(0.0)	4	(6.3)	1	(1.6)	64 (100)
	전체		36	(42.4)	32	(37.6)	1	(1.2)	6	(7.1)	1	(1.2)	85 (100)
	2순위	본청	1	(4.8)	8	(38.1)	3	(14.3)	1	(4.8)	1	(4.8)	21 (100)
		직속기관	4	(6.3)	15	(23.4)	10	(15.6)	14	(21.9)	4	(6.3)	17 (26.6)
		전체	5	(5.9)	23	(27.1)	13	(15.3)	15	(17.6)	5	(5.9)	85 (100)
	기타의견		-										

나.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로 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순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2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의 자율성 확대(21.8%), 공동 및 보조 연구원 제도 확대(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은 1순위와 2순위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1순위(32.9%), 2순위(25.9%)], 연구의 자율성 확대[1순위(22.4%), 2순위(21.2%)]로 나타났다.

직책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50.0%), 교육연구사(장학사)(37.5%)는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 연구(위)원(42.3%)은 연구의 자율성 확대, 주무관(46.2%)은 연구계획 및 진행 과정에서 외부 자문 및 심의 강화, 파견(연구)교사(33.3%)는 공동 및 보조 연구원 제도 확대를 응답하였다. 2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40.0%)는 연구계획 및 진행 과정에서 외부 자문 및 심의 강화, 교육연구사(장학사)는 공동 및 보조 연구원 제도 확대와 연구의 자율성 확대를 각각 25.0%씩 응답하였으며, 연구(위)원(34.6%)과 파견(연구)교사(33.3%)는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응답하였으며, 주무관(30.8%)은 연구의 자율성 확대를 응답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속한 조직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청은 1순위로 연구의 자율성 확대(33.3%), 2순위로 연구비 증액(33.3%)을 응답하였으며, 직속기관은 1순위(34.4%)와 2순위(29.7%) 모두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응답하였다.

〈표 IV-2〉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구분		질문						빈도	비율	
전체	전체 (1순위+2순위)	1. 연구계획 및 진행 과정에서 외부 자문 및 심의 강화						28	(16.5)	
		2. 공동 및 보조 연구원 제도 확대						31	(18.2)	
		3. 연구의 자율성 확대						37	(21.8)	
		4.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						50	(29.4)	
		5. 연구비 증액						19	(11.2)	
		6. 기타						5	(2.9)	
	전체							170	(100)	
1순위	1순위	1. 연구계획 및 진행 과정에서 외부 자문 및 심의 강화						16	(18.8)	
		2. 공동 및 보조 연구원 제도 확대						14	(16.5)	
		3. 연구의 자율성 확대						19	(22.4)	
		4.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						28	(32.9)	
		5. 연구비 증액						4	(4.7)	
		6. 기타						4	(4.7)	
	전체							85	(100)	
2순위	2순위	1. 연구계획 및 진행 과정에서 외부 자문 및 심의 강화						12	(14.1)	
		2. 공동 및 보조 연구원 제도 확대						17	(20.0)	
		3. 연구의 자율성 확대						18	(21.2)	
		4.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						22	(25.9)	
		5. 연구비 증액						15	(17.6)	
		6. 기타						1	(1.2)	
	전체							85	(100)	
구분	순위	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N	%	N	%	N	%	N	%
직책	1순위	교육연구관(장학사)	2	(20.0)	1	(10.0)	2	(20.0)	3	(30.0)
		교육연구사(장학사)	7	(29.2)	4	(16.7)	2	(8.3)	9	(37.5)
		연구(위)원	0	(0.0)	4	(15.4)	11	(42.3)	9	(34.6)
		주무관	6	(46.2)	1	(7.7)	2	(15.4)	4	(30.8)
		파견(연구)교사	1	(8.3)	4	(33.3)	2	(16.7)	3	(25.0)
		전체	16	(18.8)	14	(16.5)	19	(22.4)	28	(32.9)
	전체							4	(4.7)	
기관 소속	2순위	교육연구관(장학사)	4	(40.0)	2	(20.0)	1	(10.0)	1	(10.0)
		교육연구사(장학사)	5	(20.8)	6	(25.0)	6	(25.0)	5	(20.8)
		연구(위)원	1	(3.8)	5	(19.2)	4	(15.4)	9	(34.6)
		주무관	2	(15.4)	2	(15.4)	4	(30.8)	3	(23.1)
		파견(연구)교사	0	(0.0)	2	(16.7)	3	(25.0)	4	(33.3)
		전체	12	(14.1)	17	(20.0)	18	(21.2)	22	(25.9)
	전체							15	(17.6)	
기타 의견	1순위	본청	5	(23.8)	2	(9.5)	7	(33.3)	6	(28.6)
	1순위	직속기관	11	(17.2)	12	(18.8)	12	(18.8)	22	(34.4)
	1순위	전체	16	(18.8)	14	(16.5)	19	(22.4)	28	(32.9)
	2순위	본청	3	(14.3)	6	(28.6)	2	(9.5)	3	(14.3)
	2순위	직속기관	9	(14.1)	11	(17.2)	16	(25.0)	19	(29.7)
	2순위	전체	12	(14.1)	17	(20.0)	18	(21.2)	22	(25.9)
	전체							15	(17.6)	
기타 의견			• 유능한 전문 연구원 채용				• 전문 연구원 확보			
			• 전문 연구 인력 확보 및 충원				• 파견 교사 제도 확대			

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인적 구성 및 담당 업무 개선 방안

교육정책연구소의 인적 구성 및 담당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로 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순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자 정원 확대(3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24.7%),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시간 확보(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는 연구자 정원 확대(48.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25.9%),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시간 확보(15.3%)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시간 확보(24.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23.5%), 연구자 정원 확대(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책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60.0%), 교육연구사(장학사)(45.8%), 주무관(61.5%), 파견(연구)교사(33.3%)는 연구자 정원 확대를 응답하였으며, 연구(위)원(50.0%)은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을 응답하였다. 2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50.0%), 교육연구사(장학사)(33.3%), 주무관(23.1%), 파견(연구)교사(33.3%)는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시간 확보를 응답하였으며, 연구(위)원(30.8%)은 연구자 정원 확대를 응답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속한 조직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조직에 관계없이 연구자 정원 확대[본청(61.9%), 직속기관(43.8%)]를 응답하였으며, 2순위를 살펴보면 본청(33.3%)은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시간 확보를 응답하였으며, 직속기관(23.4%)은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을 응답하였다.

〈표 IV-3〉 교육정책연구소의 인적 구성 및 담당 업무 개선 방안

단위: 명, % (N=85)												
구분	질문										빈도	비율
전체	전체 (1순위+2순위)	1. 연구자 정원 확대 2.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시간 확보 3.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인사 이동 유예 (재직 기간 연장) 4.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 5. 행정직 공무원의 연구 업무 비중 확대 6. 기타										60 (35.3)
		전체										34 (20.0)
		3.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인사 이동 유예 (재직 기간 연장)										20 (11.8)
		4.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										42 (24.7)
		5. 행정직 공무원의 연구 업무 비중 확대										11 (6.5)
		6. 기타										3 (1.8)
		전체										170 (100)
1순위	1순위	1. 연구자 정원 확대 2.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시간 확보 3.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인사 이동 유예 (재직 기간 연장) 4.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 5. 행정직 공무원의 연구 업무 비중 확대 6. 기타										41 (48.2)
		전체										13 (15.3)
		3.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인사 이동 유예 (재직 기간 연장)										7 (8.2)
		4.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										22 (25.9)
		5. 행정직 공무원의 연구 업무 비중 확대										1 (1.2)
		6. 기타										1 (1.2)
		전체										85 (100)
2순위	2순위	1. 연구자 정원 확대 2.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시간 확보 3.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인사 이동 유예 (재직 기간 연장) 4.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 5. 행정직 공무원의 연구 업무 비중 확대 6. 기타										19 (22.4)
		전체										21 (24.7)
		3.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인사 이동 유예 (재직 기간 연장)										13 (15.3)
		4.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										20 (23.5)
		5. 행정직 공무원의 연구 업무 비중 확대										10 (11.8)
		6. 기타										2 (2.4)
		전체										85 (100)
구분	순위	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N	%	N	%	N	%	N	%	N	%
직책	1순위	교육연구관(장학사)	6	(60.0)	3	(30.0)	0	(0.0)	1	(10.0)	0	(0.0)
		교육연구사(장학사)	11	(45.8)	6	(25.0)	5	(20.8)	1	(4.2)	0	(0.0)
		연구(위)원	12	(46.2)	1	(3.8)	0	(0.0)	13	(50.0)	0	(0.0)
		주무관	8	(61.5)	1	(7.7)	1	(7.7)	3	(23.1)	0	(0.0)
		파견(연구)교사	4	(33.3)	2	(16.7)	1	(8.3)	4	(33.3)	1	(8.3)
		전체	41	(48.2)	13	(15.3)	7	(8.2)	22	(25.9)	1	(1.2)
		교육연구관(장학사)	2	(20.0)	5	(50.0)	1	(10.0)	1	(10.0)	10	(100)
기관 소속	2순위	교육연구사(장학사)	4	(16.7)	8	(33.3)	1	(4.2)	8	(33.3)	2	(8.3)
		연구(위)원	8	(30.8)	1	(3.8)	7	(26.9)	7	(26.9)	3	(11.5)
		주무관	2	(15.4)	3	(23.1)	3	(23.1)	2	(15.4)	3	(23.1)
		파견(연구)교사	3	(25.0)	4	(33.3)	1	(8.3)	2	(16.7)	2	(16.7)
		전체	19	(22.4)	21	(24.7)	13	(15.3)	20	(23.5)	10	(11.8)
		본청	13	(61.9)	2	(9.5)	2	(9.5)	4	(19)	0	(0.0)
		직속기관	28	(43.8)	11	(17.2)	5	(7.8)	18	(28.1)	1	(1.6)
	전체		41	(48.2)	13	(15.3)	7	(8.2)	22	(25.9)	1	(1.2)
기타 의견	2순위	본청	5	(23.8)	7	(33.3)	3	(14.3)	5	(23.8)	1	(4.8)
		직속기관	14	(21.9)	14	(21.9)	10	(15.6)	15	(23.4)	9	(14.1)
		전체	19	(22.4)	21	(24.7)	13	(15.3)	20	(23.5)	10	(11.8)
기타 의견			• 교육현장경험이 있는 연구원 확보 필요 • 임기제 연구원의 연구 평가 기준의 객관화 • 전공 적합성 증진									

라.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로 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순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연구 운영의 독립성 보장이 각각 32.4%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는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37.6%)과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32.9%)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31.8%)과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27.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책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50.0%)은 연구물의 평가 체계 강화, 교육연구사(장학사)(37.5%)는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연구(위)원(50.0%), 주무관(46.2%), 과견(연구)교사(41.7%)는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응답하였다. 2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60.0%)은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 교육연구사(장학사)(33.3%), 연구(위)원(34.6%), 주무관(38.5%)은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과견(연구)교사(50.0%)는 연구소 예산 증액을 응답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속한 조직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에 관계없이 본청은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1순위(33.3%), 2순위(47.6%)]을 응답하였으며, 직속기관은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1순위(39.1%), 2순위(28.1%)]로 응답하였다.

〈표 IV-4〉 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발전 방안

단위: 명, % (N=85)														
구분	질문										빈도	비율		
전체	전체 (1순위+2순위)	1. 연구물의 평가 체계 강화 2.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3. 3개월 이하 단기 연구 비율 확대 4.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 5. 연구소 예산 증액 6. 기타										24 (14.1)		
		전체										55 (32.4)		
		3. 3개월 이하 단기 연구 비율 확대										8 (4.7)		
		4.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										55 (32.4)		
		5. 연구소 예산 증액										26 (15.3)		
		6. 기타										2 (1.2)		
		전체										170 (100)		
1순위	1순위	1. 연구물의 평가 체계 강화 2.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3. 3개월 이하 단기 연구 비율 확대 4.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 5. 연구소 예산 증액 6. 기타										14 (16.5)		
		전체										85 (100)		
		2.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28 (32.9)		
		3. 3개월 이하 단기 연구 비율 확대										4 (4.7)		
		4.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										32 (37.6)		
		5. 연구소 예산 증액										7 (8.2)		
		6. 기타										0 (0.0)		
2순위	2순위	전체										85 (100)		
		1. 연구물의 평가 체계 강화										10 (11.8)		
		2.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27 (31.8)		
		3. 3개월 이하 단기 연구 비율 확대										4 (4.7)		
		4.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										23 (27.1)		
		5. 연구소 예산 증액										19 (22.4)		
		6. 기타										2 (2.4)		
직책	전체										85 (100)			
	구분	순위	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N	%	N	%	N	%	N	%	N	%	
	1순위	교육연구관(장학사)	5	(50.0)	4	(40.0)	1	(10.0)	0	(0.0)	0	(0.0)	10	(100)
		교육연구사(장학사)	4	(16.7)	9	(37.5)	1	(4.2)	8	(33.3)	2	(8.3)	24	(100)
		연구(위)원	1	(3.8)	7	(26.9)	1	(3.8)	13	(50.0)	4	(15.4)	0	(0.0)
		주무관	3	(23.1)	3	(23.1)	1	(7.7)	6	(46.2)	0	(0.0)	0	(0.0)
		파견(연구)교사	1	(8.3)	5	(41.7)	0	(0.0)	5	(41.7)	1	(8.3)	0	(0.0)
		전체	14	(16.5)	28	(32.9)	4	(4.7)	32	(37.6)	7	(8.2)	0	(0.0)
	2순위	교육연구관(장학사)	0	(0.0)	3	(30.0)	1	(10.0)	6	(60.0)	0	(0.0)	10	(100)
		교육연구사(장학사)	2	(8.3)	8	(33.3)	2	(8.3)	5	(20.8)	5	(20.8)	24	(100)
		연구(위)원	3	(11.5)	9	(34.6)	0	(0.0)	8	(30.8)	6	(23.1)	0	(0.0)
		주무관	4	(30.8)	5	(38.5)	0	(0.0)	2	(15.4)	2	(15.4)	0	(0.0)
		파견(연구)교사	1	(8.3)	2	(16.7)	1	(8.3)	2	(16.7)	6	(50.0)	0	(0.0)
		전체	10	(11.8)	27	(31.8)	4	(4.7)	23	(27.1)	19	(22.4)	2	(2.4)
기관 소속	1순위	본청	5	(23.8)	7	(33.3)	0	(0.0)	7	(33.3)	2	(9.5)	0	(0.0)
		직속기관	9	(14.1)	21	(32.8)	4	(6.3)	25	(39.1)	5	(7.8)	0	(0.0)
		전체	14	(16.5)	28	(32.9)	4	(4.7)	32	(37.6)	7	(8.2)	0	(0.0)
	2순위	본청	2	(9.5)	10	(47.6)	2	(9.5)	5	(23.8)	2	(9.5)	0	(0.0)
		직속기관	8	(12.5)	17	(26.6)	2	(3.1)	18	(28.1)	17	(26.6)	2	(3.1)
		전체	10	(11.8)	27	(31.8)	4	(4.7)	23	(27.1)	19	(22.4)	2	(2.4)
	기타의견	• 시의회의 불필요한 자료 요구 지양 • 현장의 문제 부터 연구의 시작 필요												

마. 대외적 위상 및 기능 강화 발전 방안

교육정책연구소의 대외적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로 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순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22.9%)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결과 연구결과 발표회 및 성과 공유회 횟수 확대(20.0%), 연구 성과 평가 및 분석 강화(20.0%), 연구결과물 발간 및 배포 대상 확대(18.2%),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 사업 진행(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는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22.4%), 연구결과 발표회 및 성과 공유회 횟수 확대(21.2%), 연구결과물 발간 및 배포 대상 확대(20.0%)를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와 연구 성과 평가 및 분석 강화가 각각 23.5%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결과 발표회 및 성과 공유회 횟수 확대(18.8%),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 사업 진행(17.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책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30.0%), 교육연구사(장학사)(29.2%), 주무관(30.8%)은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를 연구(위)원(26.9%)과 과견(연구)교사(33.3%)는 연구결과물 발간 및 배포 대상 확대를 응답하였다. 2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60.0%)은 연구 성과 평가 및 분석 강화, 교육연구사(장학사)(29.2%)는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 사업 진행을, 연구(위)원(34.6%), 주무관(30.8%), 과견(연구)교사(25.0%)는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를 응답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속한 조직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청은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와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 사업 진행을 응답하였으며, 직속기관은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와 연구 성과 평가 및 분석 강화를 응답하였다.

〈표 IV-5〉 교육정책연구소의 대외적 위상 및 기능 강화 발전 방안

단위: 명, % (N=85)

구분	질문										빈도	비율
전체	전체 (1순위+2순위)	1. 연구결과 발표회 및 성과 공유회 횟수 확대								34	(20.0)	
		2. 연구결과물 발간 및 배포 대상 확대								31	(18.2)	
		3.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 사업 진행								30	(17.6)	
		4.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								39	(22.9)	
		5. 연구 성과 평가 및 분석 강화								34	(20.0)	
		6. 기타								2	(1.2)	
	전체										170	(100)
1순위	1순위	1. 연구결과 발표회 및 성과 공유회 횟수 확대								18	(21.2)	
		2. 연구결과물 발간 및 배포 대상 확대								17	(20.0)	
		3.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 사업 진행								15	(17.6)	
		4.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								19	(22.4)	
		5. 연구 성과 평가 및 분석 강화								14	(16.5)	
		6. 기타								2	(2.4)	
	전체										85	(100)
2순위	2순위	1. 연구결과 발표회 및 성과 공유회 횟수 확대								16	(18.8)	
		2. 연구결과물 발간 및 배포 대상 확대								14	(16.5)	
		3.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 사업 진행								15	(17.6)	
		4.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								20	(23.5)	
		5. 연구 성과 평가 및 분석 강화								20	(23.5)	
		6. 기타								0	(0.0)	
	전체										85	(100)
구분	순위	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N	%	
직책	1순위	교육연구관(장학사)	1 (10.0)	3 (30.0)	2 (20.0)	3 (30.0)	1 (10.0)	0 (0.0)	10	(100)		
		교육연구사(장학사)	6 (25.0)	2 (8.3)	4 (16.7)	7 (29.2)	5 (20.8)	0 (0.0)	24	(100)		
		연구(위)원	6 (23.1)	7 (26.9)	4 (15.4)	5 (19.2)	2 (7.7)	2 (7.7)	26	(100)		
		주무관	4 (30.8)	1 (7.7)	2 (15.4)	4 (30.8)	2 (15.4)	0 (0.0)	13	(100)		
		파견(연구)교사	1 (8.3)	4 (33.3)	3 (25.0)	0 (0.0)	4 (33.3)	0 (0.0)	12	(100)		
	전체		18 (21.2)	17 (20.0)	15 (17.6)	19 (22.4)	14 (16.5)	2 (2.4)	85	(100)		
	2순위	교육연구관(장학사)	2 (20.0)	1 (10.0)	1 (10.0)	0 (0.0)	6 (60.0)	0 (0.0)	10	(100)		
		교육연구사(장학사)	5 (20.8)	4 (16.7)	7 (29.2)	4 (16.7)	4 (16.7)	0 (0.0)	24	(100)		
		연구(위)원	5 (19.2)	3 (11.5)	5 (19.2)	9 (34.6)	4 (15.4)	0 (0.0)	26	(100)		
		주무관	2 (15.4)	4 (30.8)	0 (0.0)	4 (30.8)	3 (23.1)	0 (0.0)	13	(100)		
		파견(연구)교사	2 (16.7)	2 (16.7)	2 (16.7)	3 (25.0)	3 (25.0)	0 (0.0)	12	(100)		
기관 소속	전체		16 (18.8)	14 (16.5)	15 (17.6)	20 (23.5)	20 (23.5)	0 (0.0)	85	(100)		
	1순위	본청	2 (9.5)	6 (28.6)	4 (19.0)	6 (28.6)	3 (14.3)	0 (0.0)	21	(100)		
		직속기관	16 (25.0)	11 (17.2)	11 (17.2)	13 (20.3)	11 (17.2)	2 (3.1)	64	(100)		
	전체		18 (21.2)	17 (20.0)	15 (17.6)	19 (22.4)	14 (16.5)	2 (2.4)	85	(100)		
	2순위	본청	5 (23.8)	1 (4.8)	5 (23.8)	5 (23.8)	5 (23.8)	0 (0.0)	21	(100)		
		직속기관	11 (17.2)	13 (20.3)	10 (15.6)	15 (23.4)	15 (23.4)	0 (0.0)	64	(100)		
		전체	16 (18.8)	14 (16.5)	15 (17.6)	20 (23.5)	20 (23.5)	0 (0.0)	85	(100)		
기타의견			• 연구 결과 질 제고 • 연구결과 확산 및 정책 반영 필요									

바.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활동 발전 방안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활동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로 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순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25.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23.5%)와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는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29.4%)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27.1%)를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32.9%)와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22.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책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40.0%)과 교육연구사(장학사)(29.2%)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 연구(위)원(26.9%)과 주무관(53.8%)은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 과견(연구)교사(41.7%)는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응답하였다. 2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관(장학관)(50.0%)과 교육연구사(장학사)(29.2%), 주무관(53.8%)은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연구(위)원(34.6%)과 과견(연구)교사(41.7%)는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를 응답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속한 조직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에 대해서는 본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33.3%)를 직속기관은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29.7%)를 응답하였다. 2순위에 대해서는 본청은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와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에 대해서 각각 28.6% 응답하였으며, 직속기관은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에 대해서 각각 34.4% 응답하였다.

〈표 IV-6〉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활동 발전 방안

단위: 명, % (N=85)

구분	질문						빈도	비율											
전체	전체 (1순위+2순위)	1. 구성원별 협의회 모임 확대					18	(10.6)											
		2. 권역별 연구소 연합 행사 활성화					27	(15.9)											
		3.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					44	(25.9)											
		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					40	(23.5)											
		5.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40	(23.5)											
		6. 기타					1	(0.6)											
	전체						170	(100)											
1순위	1순위	1. 구성원별 협의회 모임 확대					12	(14.1)											
		2. 권역별 연구소 연합 행사 활성화					12	(14.1)											
		3.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					25	(29.4)											
		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					23	(27.1)											
		5.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12	(14.1)											
		6. 기타					1	(1.2)											
	전체						85	(100)											
2순위	2순위	1. 구성원별 협의회 모임 확대					6	(7.1)											
		2. 권역별 연구소 연합 행사 활성화					15	(17.6)											
		3.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					19	(22.4)											
		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					17	(20.0)											
		5.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28	(32.9)											
		6. 기타					0	(0.0)											
	전체						85	(100)											
구분	순위	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N	%	N	%	N	%	N	%									
직책	1순위	교육연구관(장학사)	3	(30.0)	0	(0.0)	2	(20.0)	4	(40.0)	0	(0.0)	1	(10)	10	(100)			
		교육연구사(장학사)	2	(8.3)	5	(20.8)	7	(29.2)	7	(29.2)	3	(12.5)	0	(0.0)	24	(100)			
		연구(위)원	6	(23.1)	4	(15.4)	7	(26.9)	5	(19.2)	4	(15.4)	0	(0.0)	26	(100)			
		주무관	1	(7.7)	2	(15.4)	7	(53.8)	3	(23.1)	0	(0.0)	0	(0.0)	13	(100)			
		파견(연구)교사	0	(0.0)	1	(8.3)	2	(16.7)	4	(33.3)	5	(41.7)	0	(0.0)	12	(100)			
		전체	12	(14.1)	12	(14.1)	25	(29.4)	23	(27.1)	12	(14.1)	1	(1.2)	85	(100)			
	2순위	교육연구관(장학사)	0	(0.0)	1	(10.0)	2	(20.0)	2	(20.0)	5	(50.0)	0	(0.0)	10	(100)			
		교육연구사(장학사)	4	(16.7)	7	(29.2)	1	(4.2)	5	(20.8)	7	(29.2)	0	(0.0)	24	(100)			
		연구(위)원	2	(7.7)	3	(11.5)	9	(34.6)	6	(23.1)	6	(23.1)	0	(0.0)	26	(100)			
		주무관	0	(0.0)	3	(23.1)	2	(15.4)	1	(7.7)	7	(53.8)	0	(0.0)	13	(100)			
		파견(연구)교사	0	(0.0)	1	(8.3)	5	(41.7)	3	(25.0)	3	(25.0)	0	(0.0)	12	(100)			
	전체						6	(7.1)	15	(17.6)	19	(22.4)	17	(20.0)	28	(32.9)	0	(0.0)	85
기관 소속	1순위	본청	0	(0.0)	5	(23.8)	6	(28.6)	7	(33.3)	3	(14.3)	0	(0.0)	21	(100)			
		직속기관	12	(18.8)	7	(10.9)	149	(29.7)	16	(25.0)	9	(14.1)	1	(1.6)	64	(100)			
	전체						12	(14.1)	12	(14.1)	23	(27.1)	12	(14.1)	1	(1.2)	85	(100)	
	2순위	본청	4	(19.0)	3	(14.3)	6	(28.6)	2	(9.5)	6	(28.6)	0	(0.0)	21	(100)			
		직속기관	2	(3.1)	12	(18.8)	13	(20.3)	15	(23.4)	22	(34.4)	0	(0.0)	64	(100)			
		전체	6	(7.1)	15	(17.6)	19	(22.4)	17	(20.0)	28	(32.9)	0	(0.0)	85	(100)			
기타의견			• 소장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책무성																

3. 소결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정책연구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교육정책연구소의 비전(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 전략,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인적 구성 및 담당 업무 개선 방안,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교육정책연구소의 대외적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활동 발전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답변은 1, 2순위까지 선택하게 하여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발전 방안의 우선 순위까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교육정책연구소의 비전(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 전략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는 현장 기반 연구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나, 1순위로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우선 순위로 보면, 구성원의 직책별로, 교육정책연구소의 소속 별로 인식 차이가 있었다. 교육연구관(장학관)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교육연구사(장학사)는 현장 기반 연구 강화를 더 중요시하였다. 본청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구성원들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직속기관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구성원들은 현장 기반 연구 강화를 우선 순위로 선택하였다.

둘째,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1순위 답변으로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직책별로는 교육연구관(장학관) 및 교육연구사(장학사)는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연구(위)원들은 연구의 자율성 확대를, 주무관은 외부 자문 및 심의 강화를, 파견(연구)교사는 공동 및 보조 연구원 제도 확대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직책별로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 본청 소속 교육정책연구소 구성원들은 연구의 자율성 확대를, 직속기관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우선 순위로 선택하여 소속에 따른 관점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교육정책연구소의 인적 구성 및 담당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연구자 정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1순위 답변으로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직책별로는 교육연구관(장학관), 교육연구사(장학사), 주무관, 파견(연구)교사는 연구자 정원 확대

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에 비해, 연구(위)원은 임기제 연구원의 임기 연장 및 보장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직책별로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 본청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자 정원 확대를, 직속기관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자의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소속별 관점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교육정책연구소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발전 방안으로는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이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연구소가 정책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되,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직책별로는 교육연구관(장학관), 교육연구사(장학사)는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주무관과 연구(위)원은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파견(연구)교사는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소속별로는 본청 소속 구성원들은 정책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같았다. 직속기관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섯째, 교육정책연구소의 대외적 위상 및 기능 강화 발전 방안으로는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1순위로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직책별로는 교육연구관(장학관), 교육연구사(장학사), 주무관은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데 비해, 연구(위)원과 파견(연구)교사는 연구결과물 발간 및 배포 대상 확대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직책별 관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속별로는 본청 소속 구성원들은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 다양화 및 연구결과물 발간 및 배포 대상 확대를, 직속기관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성과 발표회 및 성과 공유회 횟수 확대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여섯째,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활동 발전 방안으로는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었으며, 1순위 답변으로도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직책별로는 교육연구관(장학관)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를, 교육연구사(장학사)는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를, 주무관과 연구(위)원은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를, 파견(연구)교사는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소속별로는 본청 소속 구성원들은 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발표를, 직속기관 소속 구성원들은 연구소 간 정보 공유 강화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인식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의 직책과 소속에 따라 발전 방안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육정책연구소 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 직책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각 연구소가 처한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1. 교육정책연구소 발전 방안
2.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을 전략, 운영, 성과 관리, 재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표 V-1〉 교육정책연구소 및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발전 방안

구분	범주	내용		
교육정책 연구소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속 안정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전문성 강화 ❖ 연구 자문 및 심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기반 연구 확대, ❖ 외부 연구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위)원 신분 안정 및 정원 확대 ❖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여건 확보 ❖ 주무 부서와 긴밀한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문화 형성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류 시스템 강화 ❖ 주관 행사 및 사업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성과 공유 확대, ❖ 위탁 연구 용역 관리
	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연구비 예산 수립 		
전국 교육정책 연구소 네트워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위상 확립 ❖ 세부적인 비전 수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협력 활성화 ❖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공동워크숍 내실화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 연대 활동 강화 ❖ 공동연구 성과 확산 		
	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연구소 예산 수립 		

1. 교육정책연구소 발전 방안

가. 전략

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설문 결과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교육정책연구소는 발전계획과 실행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명확한 방향 설정과 일관된 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기관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에서 설정한 비전에 적합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요청된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역사는 길게는 10년, 짧아도 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정황과 교육정책연구소의 전략적 맥락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중장기 비전에 대한 구성원 간 인식 공유를 전제해야 하며, 인식 공유를 통해 공통된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소속 안정화

현재 각 교육정책연구소는 크게 3가지 지위, 즉 본청 소속, 직속기관 소속,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본청 소속은 정책 추진력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직속기관 소속은 자율성 및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속에 따른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연구소의 임무를 명확하게 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독립적 연구 수행을 위한 자율성 보장과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 제시형 연구 등 주된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지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일부 시·도 교육정책연구소가 본청과 직속기관 소속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불안정성 및 변동성을 지양해야 한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안정적 및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정책연구소가 시·도교육청의 입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기관 또는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필수적 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정재균, 이상철, 2017).

나-1. 운영: 연구 전문성 강화

1)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

역량 강화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연구방법론 연수 등 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별 연구역량강화비 예산을 배정하여 연구자 맞춤형 연수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 연구 일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담당 연구와 관련된 학술대회 및 학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자의 시야를 넓히고 최신 학술 연구의 동향에 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장 기반 연구 확대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현장의 요구와 문제를 직접 반영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도 있다. 현직 교사들이 공동연구자로 직접 연구 수행에 참여하거나, 연구대상 또는 연구참여자로 연구에 협력할 수 있는 연구를 확대해서 수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주제에 대해 교육청 부서의 요청 및 필요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장성 높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연구소 소속의 교사(파견 교사, 학습연구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현장 기반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효율적일 것이다. 반복적 행동 조사를 통해 경향성을 추적하는 교육중단연구도 현장 및 데이터 기반 연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3) 연구 자문 및 심의 내실화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 진행 과정에서内外부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가 내실화 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내용 및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 수당을 지급하면서 대면 및 서면 자문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 선정부터 자문 실시, 자문 의견 수렴 후 반영 등의 모든 절차에서 책임 연구자 개인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 교육정책연구와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연구의 경우에는 외부 연구자 보다 내부 연구자들의 의견과 통찰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교육정책연구소별로 일정 및 업무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 및 운영하는 것이 요청된다.

4) 외부 연구자원 활용

현재 대부분의 교육정책연구소 연구는 소속 연구원이 책임을 맡고, 해당 연구 주제를 전공한 교수급 연구자가 공동 또는 협력 연구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전 및 울산교육정책연구소 등은 모든 연구보고서에 교수의 검토 또는 심의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으며, 보조연구원에 석사급 보조연구원 제도를 활용하여 단순 통계 작업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외부 연구자원의 도움을 얻어서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 소속의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연구 지원단 또는 자문단 등의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석사급 이상 또는 교육정책적 식견이 탁월한 자원들을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발하고, 선발 후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위상을 고양시키며 자문 의견의 질 관리에도 노력해야 한다.

나-2. 운영: 연구 효율성 강화

1) 연구(위)원 신분 안정 및 정원 확대

정책연구의 질 관리를 위해 연구인력 확대와 연구원 신분 안정이 필요하다. 전문연구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신분이 불안하면 소신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도 어렵다(정재균, 이상철, 2021). 현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를 주로 담당하는 연구(위)원은 모두 일반임기제 신분이다. 대부분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최초 5년 이내로 계약하면서, 2+2+1년 또는 2+1+1+1년으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는 “성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조건을 두며 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연구소들도 있다. 연구 성과의 질적·양적 평가에 기반한 재계약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재계약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기제 연구(위)원 스스로 재계약 여부 등 본인의 임기를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신분과 임기는 법령에 정해진 것이라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할 순 없지만,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처럼 재채용 절차 없이 현재의 5년 임기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가능하다(정재균, 이상철, 2017). 아울러 전문적 식견과 학술적 자격을 갖춘 연구(위)원 정원을 확대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연구사/장학사의 연구 여건 확보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전문직 연구사(장학사)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연구까지 수행하는 비율은 많지 않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수행을 희망하는 연구사(장학사)에게 연구 시간을 보장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사(장학사)는 평균 2년 정도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인사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희망 시 인사 이동을 유예하여 재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책 연구 분야의 전문 연구사/장학사 TO로 선발하여 장기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요청된다. 연구사/장학사의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수행 유경험자 또는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를 조건으로 인사 발령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3) 주무 부서와 긴밀한 관계 형성

교육정책연구소의 효율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책 주무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연구 계획(착수)·중간·최종 보고회에 연구자 뿐만 아니라 소장, 연구사(장학사)도 동석하여 연구 수행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정책의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와 정책 집행 간의 유기적 연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4) 신뢰 문화 형성

교육정책연구소 내부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뢰는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정보 및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이상진, 안국찬, 2024). 또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피드백 문화가 조성되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정책연구소 조직 내에서 투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각 구성원의 역량과 의견이 존중받을 때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프로세스의 개선, 근무환경 개선, 구성원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신뢰 문화가 확립된 교육정책연구소는 구성원들의 몰입도와 성과를 극대화하며, 장기적으로 연구소의 역량을 고양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다. 성과 관리

1) 정책 환류 시스템 강화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되고, 그 효과가 다시 연구로 이어지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 성과 공유 확대

현재 교육정책연구소별로 연 1~2회로 진행하는 연구결과 발표회 및 성과 공유회의 횟수를 확대하는 것도 요청된다. 아울러 연구 성과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콜로키움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요청된다. 발간된 연구결과물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 현장 및 부서에 공유해야 하며, 인쇄물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성과를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외부 공문을 발송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물을 공유 및 확산하고 있다. 연구 성과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현장에 확산시키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분량이 긴 연구보고서를 가독성 높은 이슈 페이퍼나 카드 뉴스 형식으로 재가공하여 정책 결정자, 교사, 학부모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관 행사 및 사업 다양화

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와 사업을 다양화하여 대외적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콜로키움, 컨퍼런스, 워크숍 등의 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연

구(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타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공동주관 행사를 총괄할 수 있다. 서울, 경북,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국제교육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학생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전남과 충북교육정책연구소는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 발표 사업,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학생 모니터단 및 정책토론회를 운영 중이다.

4) 위탁 연구 용역 관리

교육청 내 교육정책연구소의 위상을 고양하고 정책부서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수행의 질관리를 위하여 외부 연구 용역(위탁 연구) 관리를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위탁 연구 관리 업무는 업무량이 많고 연구 기획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담당 연구사 또는 연구원을 배정해야 한다. 또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 용역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의 자문, 연구 용역 입찰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참여, 연구 중간 평가, 연구보고서의 질 관리 등 연구 기획에 대한 부분만 전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인천교육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연구들에 한해서 제안서 평가, 착수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참여하여 연구의 질 제고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일환으로 연구위원이 위탁연구 심의에 참여하는데, 심의 시간을 연 최대 60시간까지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라. 재무

최근 3년간 교육정책연구소 별 예산 편성을 보면, 운영 사업의 변화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사업비(연구비) 감액이 교육정책연구의 축소 또는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 배분함과 동시에 연구소 본연의 임무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발전 방안

가. 전략

1) 법적 위상 확립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위상은 각 교육정책연구소의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처럼 비공식적 모임의 성격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같은 공식적 기구의 성격으로 발돋움 할 것인지에 대한 위상 확립 측면의 전략적 고민이 요청된다(정재균, 이상철, 2017). 이에 따라 교육부,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부적인 비전 수립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가 혁신적인 교육정책 연구와 실현 가능한 정책 개발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규정(2015.10.13. 제정)에 명시된 ‘목적’은 “교육정책연구소 간의 정보 공유, 공동연구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비전을 수립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의 차별성이 인정되면서 공통의 목표를 위한 연구 및 사업 운영 전략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토대로 각 교육정책연구소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지역성, 현장성, 시의성 높은 연구 주제 및 성과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운영

1) 연구 협력 활성화

각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자문 및 학술발표 행사에 유사 연구를 먼저 수행한 타지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자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발표자 및 토론자로 적극 초청할 필요가 있다. 해당 주제의 연구 내용 및 결론 도출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타 선행연구자들보다 교육정책연구소 소속의 선행연구자가 더 높은 적합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연구의 과정 및 성과를 돋는 “연구 품

앗이”가 활성화된다면 추후 다른 연구 협력도 자연스럽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국책연구기관 등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것도 요청된다.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직능 회원’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직능단체 대표(실무자)들과 각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연구 협력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2) 공동워크숍 내실화

현재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주요 일정(사업)은 실무자 회의(분기 1회), 공동 워크숍(반기 1회), 공동연구(연 1회)이다. 연 2회, 1박 2일 일정으로 15여명이 참석하여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순회하며 운영하는 공동 워크숍(배움자리)은 많은 프로그램을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다보니, 충분한 시간 확보가 안 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소별 자율 일정으로 진행되는 둘째날 일정을 워크숍의 취지대로 공식적인 공동 일정으로 전환하여 첫째날 역할별(대표, 실무자, 연구원, 연구교사, 행정) 모임에서 나누어진 내용을 공유하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역할별 논의 사항을 모든 구성원이 함께 결정해야 할 안전이나, 공동연구에 대한 유익한 토론 의견, 각 교육정책연구소의 협조 사항 및 협의 안전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하반기 워크숍은 되도록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공동 연구 주제에 대한 분임별 토론을 심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각 연구소별 연간 사업 성과와 내년 계획을 공유할 수 있으면 각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될 것이다. 특히 연구자 모임 때에 권역별로 필요한 공동연구 주제를 수립하여, 전국 공동연구와 별도로 시의성 있게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온라인 플랫폼 구축

현재 각 교육정책연구소 실무자 1인이 대표로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하여 주요한 일정 및 문서를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는 인사발령으로 중도에 입장하는 실무자도 채팅방의 이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하지 않은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논의 내용 및 공유자료를 즉시 확인할 수 없으며, 중요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교육

정책연구소네트워크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블로그 또는 카페 등)을 구축하여 공동 연구보고서, 각종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적급별로 긴밀한 논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계시판 등급을 구분하여 열람 및 작성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17개 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서 각 교육정책연구소별 사업 안내 및 연구결과 공유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년도 주관 연구소 실무자가 주 관리자를 맡고, 변경 때마다 권리자 이양을 한다면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성과 관리

1) 대외적 연대 활동 강화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는 다른 연구소네트워크와 다르게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역성, 지방교육자치의 현장성, 전국을 포함한 연대성이라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 관련 국책, 대학, 민간 연구소와 차별되는 이러한 특장점을 앞세워 대외적 연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인 ‘교육정책네트워크’³⁾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허브로서 한국교육개발원 내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가 긴밀하게 협력 및 교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연구 관련 타 기관과 소통하는 창구는 당해 년도 공동연구 책임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이 담당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3) 교육정책네트워크 개념도(한국교육개발원, 2024)에 따르면 시도 교육정책연구소가 연구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각종 교육 관련 학회들의 연차학술대회나 포럼, 세미나 등에 분과 세션 형태로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 분과세션을 얻어서 공동연구를 발표하거나 학술대회 주제에 연관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육정책연구소들에서 발표를 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2) 공동연구 성과 확산

평균 5개 교육정책연구소가 참여하고 연 2~3개가 수행되는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공동연구의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내적으로는 하반기 공동워크숍 발표 후 심층적인 토론 시간을 확보하여 공동연구의 성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요청된다. 외적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석하거나,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때 심사료 및 게재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재무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재정은 규정 제8조(재정)에 따라 별도의 회비는 납부하지 않고, 사안 발생시 각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6조 임원’ 규정에 따라 대표가 호선된 연구소에서 사업별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담되도록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권역별 대표가 소속된 연구소에서도 권역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연구 실적에 대하여 각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량을 인정해주는 것과 함께 책임연구소에서 공동연구 예산을 배정하여 회의비, 자문비, 인쇄비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동윤, 정효미, 김영춘. (2021).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연구 동향 및 활용 분석: 전북 교육정책연구소 2011~2020년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 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 김성수. (2000). 독일의 공공연구기관 시스템. 과학기술정책, 5/6월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김재영. (2001). 정부연구기관 기관평가시스템의 비교연구. 2001년 한국경제학회 및 기술경영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 1-20.
- 나민주, 박수정, 하봉운, 차지철. (2019).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가능성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141-150.
- 류숙원, 손지은. (2021). 지방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5(2), 55-85.
- 민철구, 박기범, 조현대, 박은진. (201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현황 및 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수정, 왕문혜, 나민주. (2024). 토퍼 모델링을 활용한 시도교육청 정책연구 동향 분석: 교육정책연구소 연구를 중심으로. 지방교육경영, 27(1), 109-138.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교육부 권한이양에 따른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및 조정 검토 TF 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정책기획 역량 강화와 정책학습을 중심으로.
- 성병창. (2014).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개발 및 조정.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 연구발표회.
- 양성관. (2019). 연구기관과 시도교육청 간 관계의 정치학: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6(3), 173-203.
- 이동규. (199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DEA의 적용. 충남대학교 경상 대학부설 경영경제연구소 경영논집, 9(1), 1-85.
- 이민형. (2001).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성과평가지표체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상진, 안국찬. (2024).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8(1), 41-62.
- 이상철, 김옥희, 신혜진, 이덕화, 이준희. (2018). 유·초·중등교육 권한 강화에 따른 시도교육청 기능 개편 방안. *광주교육정책연구소*.
- 이진용. (2008). DEA 모형을 이용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 연구부서의 효율성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원. (1997). 정부출연연구소 기관평가제도의 설계 및 운영현황. *과학기술정책*, 103, 35-48.
- 이혜정, 김현규, 남미자. (2017).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동향 분석 (2013~2016). *경기도교육연구원*.
- 임환, 임호순, 송용일. (2008).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략적 성과관리체계(BSC) 구축 사례. *기술혁신학회지*, 11(4), 639-670.
-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18). 전국교육정책연구소 현황,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상반기 공동워크숍자료집.
-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a).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2024b). 2024년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6월 실무자 협의 결과.
- 정양현, 정규채, 방성식. (2007).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BSC 도입사례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9(1), 283-309.
- 정재균, 이상철. (2017).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
- 정황모, 김진석, 정미정. (2000).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의 실제. *과학기술정책*, 5/6월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조용래, 박현준, 이정수. (20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사에서 배우는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 *기술혁신학회지*, 23(4), 668-697.
- 차상철. (2014). 민선교육감 시대,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변화와 과제. *한국 교육행정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63-168.
- 최준렬, 박삼칠, 김왕준, 노영현. (2021).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체제 개편방안 연구.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 (2024). 2024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 실행계획서.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 Brigham, E. F., & Ehrhardt, M. C. (2013). *Financial Management: Theory & Practice*. Cengage Learning.
- Cameron, K. S., & Whetten, D. A. (2013).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Comparison of Multiple Models*. Academic Press.
- Kaplan, R. S., & Norton, D. P. (1996). *The Balanced Scorecard: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King, D., & Lawley, S. (2013). *Organizational Behaviour*. Oxford University Press.
- Oliver, C. (1991).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1), 145–179.
- Scott, W. R. (2003). *Organizations: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Prentice Hall.
- Weikart, L. A., Chen, G. G., & Sermier, S. (2013).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Using Money to Drive Mission Success*. CQ Press.
- Link, A. N., & Scott, J. T. (1998). *Public Accountability: Evaluating Technology-Based Institutions*. Kluwer Academic Publishers.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우)21554 http://www.ice.go.kr 032-423-8232
ISBN	978-89-6960-097-4 (비매품)

*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